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이 준 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우리 언론은 현재 정파성 시비, 정당성 훼손, 신뢰의 하락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언론의 위기를 구성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의 위기의 본질이 새로운 담론 공중의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이러한 공정성 요구가 갖는 담론 윤리적 함의를 규명하려 한다. 우리 사회의 언론은 다양한 계층, 지역, 직업, 이념 집단, 이해 집단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언론의 담론에 영향을 받는 계층, 지역, 직업, 집단 등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패가 공중의 광범위한 공정성 요구를 촉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이념적으로 비탄력적이고 동시에 폭이 좁은데, 이 역시 언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 된다. 결국 이 연구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본질은 결국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이며 이는 최근 5년간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등장한 '비판적 담론 공중들'(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공중은 이념적,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비판만 일삼을 뿐 공정한 담론의 규범을 준수하는 공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나는 언론이 공정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리고 비판적 담론 공중이 공정성 규범에 대한 내면화에 실패하는 한, 우리가 끊임없는 이념적 투쟁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비판적 담론 공중, 공론장

* 이 글의 초고에 대해 논의해 주신 김택환, 문종대, 박명진, 박인규, 이민웅, 조희연, 진중권, 최영재 등 여러 선생님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2003년 2월 14일 한국언론재단의 <16대 대선 미디어 영향력의 변화와 매체별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글의 초반부는 2004년 4월 29일 언론광장 월례발표회 <언론의 편파성 시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논의되었으며,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04년 7월 21일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엄 <전환기의 한국언론>에서 발표되었다. <표 2>의 분석을 수행한 백영민 군에게 감사를 표한다.

** jwrhee@snu.ac.kr

목 차

1. 관찰: 한국 언론의 변화

1) 문제 제기과 주장

2. 개념 비판: 객관성, 편파성, 공정성

1) '언론의 객관성' 과 '객관성'

2) 중립성/불편부당성

3) 공정성

3. 분석: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

1) 비판적 담론 공중의 성격

2) 공정한 언론

4. 결론을 대신함: 언론의 공정한 공론장 형성 및 유지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증가한 이유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갖는 담론 윤리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지난 2004년 총선 정국을 계기로 현저하게 드러난 한국 언론의 정치적인 문제점을 정파성, 상호비판의 증가, 신뢰의 하락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한국 언론의 정치적 문제점을 보면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최근 5년 특히 폭발적으로 시민의 언론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다는 관찰과 또한 이를 반영하듯 언론 간 상호비판도 증가했다는 관찰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글에서 단순히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언론 상호간 비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는 언론에 대한 소모적인 비난과 비방, 시비와 말꼬리 잡기에 머무를 뿐 적당한 비판적 담론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담론 규범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이 글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왜 이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담론 규범은 무엇인지 탐색하려 한다.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증가가 한국 사회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중’의 등장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공중이 누구이며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된다. 나는 최근 한국 언론에 대해 제기되는 소모적인 비난, 비방, 또는 비판의 본질은 결국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이며 이는 최근 5년간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등장한 ‘비판적 담론 공중들’(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공정성 요구라고 주장하려 한다. 결국 ‘비판적 담론 공중’의 정치적 요구, 담론 전략, 그리고 그들의 사회구성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비판적 담론 공중’은 언론에 대해 공정성 요구를 제기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 공정성 요구란 자신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대변되지 못함에 대한 분노와 염려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계기를 표출하는 데 머물고 있을 뿐 아직 담론 규범을 창출하는 데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비판적 담론 공중’은 이념적 쟁론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정파간에 합의 가능한 담론적 규범을 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직 부정적 계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글에서 나는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전제하는 담론의 ‘공정성 원칙’이 구체화된 담론의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언론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담당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관찰: 한국 언론의 변화

나는 최근 5년간 우리 언론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노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고 본다. 그 변모의 양상은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17대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된 것으로서 기사의 내용, 품질, 편집, 스타일 등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특수한 양상이라고 본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와 17대 총선 과정에서 관찰된 언론의 수행(performance)을 검토한 연구들(권혁남, 2003; 우송용, 이준웅, 2002; 양승찬, 2003; 이준웅, 2003)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의 언론 수행에 대한 연구들(강명구, 2004; 이민웅, 윤영철, 윤태진, 최영재, 김경모, 이준웅, 2004), 그리고 기타 최근 언론의 정치적 성격을 비판한 논의들(강명구, 양승목, 엄기열, 2001; 이재경, 2004; 이준웅, 2005)을 기초로 그 특수한 정체성 노출의 방식을 관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난 대선과 총선 정국에서 언론은 정치적 현실의 전달자, 매개자, 해설자의 역할을 넘어서 정치적 투쟁 자체를 수행하는 행위자의 역할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적 영역에 걸쳐 있는 신문사와 민영방송은 물론 새롭게 공적 영역을 파고들고 있는 인터넷 언론, 그리고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까지도 ‘결과적으로 또는 효과로 보았을 때 정파적인 양상을 띠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쟁론 자체를 구성하는 담당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한때 언론이 각 정파를 대신해서 대리전을 치루는 것을 염려하던 평자들은 이제는 정쟁 자체를 구성하고 정쟁의 당사자가 된 언론을 보며 망연해하고 있다. 한때 언론이 이념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 염려하던 비판가들은 이제 언론이 각 사회집단의 정치적·이념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평가의 기준점이 된 것을 보며 당혹해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언론은 이제 ‘당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총선 직전의 탄핵정국과 같은 갈등적 상황에서는 심지어 충분히 당파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면구스럽다고 생각하는 듯, 상대 정파에 속한 정당이나 언론에 대해 불리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문제 삼고 상대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어떻게든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제는 조선일보를 보수신문 또는 보수신문이라 칭하고 한겨레를 진보신문 또는 급진적 신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언론사에 대해 불여진 진보니 보수니 하는 형용어는 일상적인 정치적 담론에서 따로 확인할 필요 없는 형용어가 되어 버렸고 그 형용어의 당사자인 언론조차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당연시하고 있다.

둘째, 언론사들의 상호 비판이 활성화되면서 언론의 상호비판은 ‘사회적 제도’로서의 언론의 정당성 훼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언론사의 상호 비판을 보면 그 내용이 다른 언론사의 텍스트에 대한 사실성이나 부주의한 편파성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서 그 언론사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사 간 비판의 문제가 언론의 객관성 또는 불편부당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차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조선일보가 “[인터넷 언론들]은 겉핥기만 중중동의 보도를 편파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듯 하나, 사실은 한나라당을 때리기 위한 우회 공격 수단으로서 중중동을 걸고 넘어지는 수가 많다”고 주장하거나(조선일보, 태평로, 2004, 4, 9), 문화방송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들은 매우 꾸준하게 탄핵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비판 없이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비판할 때(신강균의 사실은, 2004. 3. 19), 그 비판의 논점은 문제가 되는 언론의 사실 관계 확인의 실패나 사실에 대한 부주의한 해석에 따른 편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의도적이며 진정성이 담긴 정파적 태도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었다.

과거 우리 언론은 서로 ‘동종업체 봐주기’ 차원을 넘어서 무언의 담론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언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비판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따라서 지난 시절 언론학자와 평자들은 이러한 무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 간 ‘매체 비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언론은 서로 비판과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언론의 상호비판이 시민의 담론적 실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언론 비판은 항상 유용하다. 하지만 언론 비판이 언론제도에 대한 정당성 위기를 초래한다면 이는 정녕 언론 비판이 원래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제도로서의 언론이 겪는 정당성 위기는 우리 사회의 공적 담론의 생산자, 매개자, 관리자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론장이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언론은 현재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 챌겠지만 그 잘못이 바로 ‘과거에는 장려되었고 권장되었던 언론의 상호비판’에서 일부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채지는 못한 것 같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관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언론, 특히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신문과 방송의 정치적 영향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 우리 언론은 시민의 정치적 활동에 가장 중요한 정보적 지위와 해석적 권위를 누렸다. 특히 과거 시민들은 언론의 정보적 활동과 도덕적 훈육을 동일시하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언론을 그리고 언론인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지식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언론의 해석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 정보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의심 하곤한다. 한국 언론의 정보적, 해석적 권위의 하락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대한 신뢰의 하락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언론재단>이 지난 1986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1986년에서 1994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1994년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래 <표 1>에 제시하듯, 1996년 3.46, 1998년 3.21, 2000년 3.22, 2002년 3.13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방송에 대한 신뢰도 역시 1994년을 정점으로 1996년 3.42, 1998년 3.29, 2000년 3.41, 2002년 3.27로 부침을 거듭하지만 완만하게 하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실 이 결과는 신문과 방송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의 공신력의 저하를 지시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표1> 일반 공중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평가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신문	3.97	3.46	3.21	3.22	3.13	3.18
방송	4.08	3.42	3.29	3.41	3.27	3.29

*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1994-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재구성

그런데 최근 전개되고 있는 언론의 신뢰성 하락은 특정 언론 매체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불신의 차원이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 내지는 언론인의 행위 전반에 대한 공공연한 문제제기를 동반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최근에 들어, 진보적인 독자는 “꼴통 신문”

1) 물론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주요 방송 뉴스나 주류 신문사의 뉴스에 대한 불신과 왜곡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85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주창하고 나중에 범민주화 운동으로 확대된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왜곡보도를 거부한다’는 주장으로 출발했다. 또한 1980년대 말 소리 없이 등장해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일요신문> 등의 이른바 ‘정치 타블로이드 주간지’에 대한 대중적 수요는 주류 언론의 정보부재와 왜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언론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특정 언론사, 그것도 권위주의적 정권의 나팔수로서 지목된 언론사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채택되었으며 결국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전략적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정치 타블로이드 주간지’가 제공한 대안적 정보와 해석의 성격을 보면 이는 주로 정치 스캔들과 음모에 대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 당시에는 대안적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도 없었고, 주요 신문사에 대한 적극적 비판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현상은 우리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의 사실을 비롯하며, 보수적인 시청자는 “적군 방송”의 뉴스를 외면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웃음과 외면에는 언론에 대한 깊은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다. 이제 시민들은 과거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신문의 중개자, 해설자,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의심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행사되었던 언론의 권위에 저항하고 또한 도전한다. 이에 따라서 언론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고 있다. 적어도 해석적인 차원에서의 언론의 권위는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언론은 지금 전반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언론이 정치적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정쟁의 중심적 담당자로서 더욱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비례해서 그 정보적, 해석적 권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 문제 제기와 주장

한국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언론에 대한 비판과 언론 간 상호비판이 최근,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정국과 총선 정국을 거치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는 언론에 대한 편파를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²⁾ 즉 199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언론의 편파 및 공정성에 대한 보도는 한겨레와 같은 ‘언론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언론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 총선 정국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른바 ‘미디어 선거의 원년’이라고 불리는 2002년 대선을 계기로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언론의 편파 및 공정성 보도를 다루기 시작했고, 2004년 총선에는 이러한 보도가 전체 언론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³⁾

비록 <표 2>는 언론에 보도된 편파성 및 공정성 비판의 증가 추세만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추세는 2002년 대선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포털 등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직접 보도된 편파성 및 공정성 비판 담론의 증가는 사실 일반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의 증가를 반영한다고 본다.

2) 한국언론재단 KINDS와 중앙일보 DB를 이용해서 각 선거 전 세 달 동안 4개 신문사의 전체 기사를 주제어 검색을 이용해서 추출하고, 추출된 기사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서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04년 총선관련 기사의 경우 “(총선거회의원선거)&(매스컴언론매스미디어매스커뮤니케이션)(편파공정)”라는 주제어를 이용해서 검색한 후, 그 내용이 언론관련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분류했다. 언론학을 전공한 전문적인 코더 한 명이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표 2>의 집계 표도 만들었다.

3) KBS와 MBC의 경우 2004년 총선 보도에서 언론 편파 및 공정성 관련 기사가 각각 31건과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2004년 이전 선거에서는 각각 몇 건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일반 시민들에 의해 직접 제기되었으며, <표 2>와 같은 추세는 이러한 시민의 언론에 대한 비판의 증가에 기초한 하나의 눈에 띄는 지표라는 것이다. 사실 과거 5공, 6공 시절에도 언론의 정치적 편파성과 관여성이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시민의 비판적 인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최근 5년 간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이 직접 전면적으로 언론에 대해 염려하고, 불신하고, 비판하고, 공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02년과 2004년을 거치면서 시민의 언론에 대한 접근, 인식, 평가는 질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언론사 불공정 및 편파 관련 보도의 증가

(단위: 기사 수)

	1997년 대선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조선일보	4	4	3	29
중앙일보	6	1	2	13
동아일보	6	6	10	43
한겨레	19	18	27	34

* KINDS와 중앙일보DB 분석결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또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즉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언론사 간 상호비판과 시민의 언론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결국 무슨 문제이며 또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문제의 본질을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근 한국 언론에 대해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최근 지적되고 있는 한국 언론의 신뢰의 위기는 물론 언론에 대한 객관성, 사실성, 편파성, 의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한국 언론의 공정성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나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공정성 요구가 최근 이렇게 급격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이른바 ‘비판적 담론 공중들’(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른바 ‘비판적 담론 공중’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비판과 언론 간 상호비판에 의해 표출되는 공중의 공정성 요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의 최종적인 목표는 위에서 제시한 명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단순히 자기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담론

규범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담론 규범을 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개념 비판: 객관성, 편파성, 공정성

현재 언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 담론은 객관성, 사실성, 불편부당성, 의도성, 공정성 등과 같은 언론의 가치 또는 규범과 관련된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러한 가치 또는 규범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현실적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 동시에 이러한 가치나 규범이 우리 언론에 대해 얼마나 구속력 있는 가치 또는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객관성, 사실성, 불편부당성, 의도성, 공정성 등과 같은 개념을 동원한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오히려 언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부적절한 논쟁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한 언론 비판이 오히려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 나는 한국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본적으로 객관성, 중립성, 편파성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정성에 대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 객관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1) ‘언론의 객관성’과 ‘객관성’

먼저 언론 비판과 관련해서 객관성 개념을 사용하는 데 개념 적용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객관성’(objectivity in journalism)과 ‘객관성’(objectivity)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된 규범/의식/전략으로서 형이상학적 실재론, 인식론적 객관론, 가치론의 사실과 가치의 구분 등에 대한 논의에 사용되는 ‘객관성’ 개념과 다른 것이다.

전자, 즉 ‘언론의 객관성’은 1830년대 미국의 페니 프레스(penny press)라는 상업적 대중신문의 등장과 함께 실행되기 시작한 ‘견해’와 ‘정보’를 구분하는 보도양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Schudson, 1978). 이는 1차 대전 후 미국 언론인의 직업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규범화되고 지배적 가치로 확립된 일종의 직업적 규범/의식/전략이다(Schiller, 1981; Schudson, 2001).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기존 문헌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 개념은 일련의 개념으로 재 분석되는 분석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지닌 특정한 행위 양식을 포괄 적으로 지칭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요약컨대 ‘언론의 객관성’은 (1) 사업부 와 편집부의 구분, 출입처 시스템 운영, 정보원의 이용방식 등과 같은 언론인의 직업 관행 이면서 동시에 사건을 뉴스 기사로 전화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전형화된 작업양식 (typification)으로 구조화된다(Tuchman, 1972). 따라서 이는 전문화된 언론인이 수행하는 의식적(ritualistic) 행위 양식으로 나타난다. ‘언론의 객관성’은 또한 (2) 의견/사실 면과 정 보 면의 구분, 역피라미드형 기사 구성, 기자의 선호도나 감정을 배제시킨 문장의 사용 등 과 같은 행위를 포괄하는 일종의 텍스트 구성의 전략이고(Mindich, 1998), 동시에 (3) 언론 사의 사시나 언론인 협회의 윤리규정, 그리고 기초 언론학 교재 등에 애매하게 조문화된 가 치이며 규범으로 작용한다(Gans, 1979).

역사적으로 ‘언론의 객관성’이란 18세기 초 미국의 전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통신사의 성립, 도시인구의 급증, 그리고 새로운 소비적 중산계층의 등장 등과 결합해서 확립된 역사 적 구성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언론의 객관성’은 문예적 저널리즘이나 뉴 저널리즘과 같 은 이중 가치의 등장과 함께 약화되거나 정밀 저널리즘과 같은 변종 전략에 따라 강화되는, 즉 역사적으로 부침을 거듭하는 하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그 양식적 특수성은 영미 언론의 역사와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성공적으 로 이식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Schudson, 2001).

이렇게 이해할 경우, ‘언론의 객관성’은 이른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객관성 개념과 약 간 거리가 있다. 언론의 객관성은 어떤 문장이 사실과의 일치(혹은 다른 방법으로 라도) 진리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실재론적 논의나 사실과 가치의 구분 가능성 에 대한 윤리학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객관성’ 개념과 다른 것이다. 물론 후자의 확립 또는 그에 대한 합의가 전자의 구성에 필요한 이론적 전제를 제공한다는 연관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언론의 수행에 대한 평가나 비판에 ‘객관성’ 자체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 도 않으며, 심지어 적절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객관성’에 대한 논의로 환원해서 논의하는 것은 흔히 덧없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 객관적 사실과 조응함으로써 진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명 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명제 가운데 실제 뉴스가 되는 것은 어차피 아주 일부에 불과 하다. 그리고 어떤 뉴스의 문장이 주관적 가치 표현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 했다고 할지라도 그 뉴스가 ‘객관적인 뉴스’ 인지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는 쉽게 수렴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은 사실과 가치의 구분보다도 더 큰 범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언론인들이 생산하는 뉴스 문장들 중에는 비록 실재론과 가치론이 제시하는 객관성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뉴스가 아니다’ 라고 평가받지는 않을 것이다. 뉴스란 객관적인 문장의 집합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리히텐버그(Lichtenberg, 1991)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언론의 객관성’이란 모든 문제에 대한 단 하나의 답이 있으며 그 답을 언론인이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언론인이 객관성을 주장할 때, 그는 사물의 사실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철학자나 과학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객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인의 임무는 철학자나 과학자의 임무와 다르며,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과 가치도 철학자나 과학자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언론의 객관성’은 ‘객관성’과는 달리 단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대답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뉴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부 잘못된 대답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작동할 뿐이다. 결국 ‘언론의 객관성’에서 ‘객관성’이 의미하는 바는 ‘언론인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는 이념/이상(ideal)’을 규제적 원리(a regulative principle)로서 가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범을 정하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객관성 이념/이상은 모든 개별적인 기사의 객관성을 구현하는 구성적 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한다.⁴⁾

사실 객관성이 아니라 언론의 객관성을 들어 한국 언론을 비판한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

4) 웨스터슈탈(Westerstahl, 1983)과 맥퀘일(McQuail, 2000) 등을 비롯한 언론의 객관성을 규정하기 위한 일련의 논의는 약간 혼란스럽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언론의 객관성은 사실영역과 가치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객관성의 하위 구성요소인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이 각각 사실영역과 가치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기준이 되면 전자는 ‘기술적 사실성의 확립’을 후자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을 규정한다는 식의 논의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이중적으로 혼란스럽다. 첫째, 언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위와 같은 기준들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가 자명하지 않다. 둘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분된 사실과 가치의 판단기준이 다시 ‘객관성’이라는 포괄적 가치에 의해 통합되어 최종적인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들의 논의에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일 것이다. 아마도 객관성은 느슨하게 ‘진실성’, ‘적합성’, ‘균형’, ‘불편부당성’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을 적용시켜 구성하는 일종의 ‘다중적 기준의 중첩적 적용’을 통해서 확보되는 복합적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선의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성이 서술문장(indicatives)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불편부당성은 주로 시간/공간/가치에 대한 비례적 가치판단을 담은 평가적 규정문장(prescriptives)에 대해 적용된다. 하지만 어떤 사태는 물론 그 사태에 대한 진술도 간단하게 서술적인 것과 규정적인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다. 전자가 후자를 의미론적으로 함축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가 전자에 대한 판단 조건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Putnam, 1981). 결국 우리는 막스 베버 이래로 채택된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라는 정식을 ‘엄밀하게 적용할 방법이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느슨하게 적용하면 흔히 소용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인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에 앞서 ‘그릴 수 있을까’를 자문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 현명한 답변을 에트마와 글래스(Ettema & Glasser, 1998)에서 찾을 수 있다.

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보다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연 ‘언론의 객관성’ 개념을 들어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마저 제기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객관성을 들어 언론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한국 언론의 지배적인 이상/이념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규범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언론인이 ‘언론의 객관성’이란 규범/의식/전략을 근본적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직업적 행위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면화시켰으며, 그에 따라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위반을 심각한 규범적 일탈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정 한국 언론인들이 진정 ‘언론의 객관성’을 자신의 활동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는 직업적 규범으로 내면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언론인은 위의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 언론이 시민적 삶에 대한 계몽과 훈육을 주된 임무로 담당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주요한 임무로 자임해 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몽과 훈육 그리고 비판과 감시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론의 객관성’과 관련한 어떤 내재화된 규범/의식/전략이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언론에 대해 ‘객관성’ 자체를 문제 삼을 만한 경우가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른바 사실 또는 진실에 대한 호소는 다른 어떤 영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언론 영역에도 통한다. 예를 들어, 지난 제 17대 총선 정국에 우리 언론에 대한 비판 가운데 기사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할 만한 경우가 있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주요 신문이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사실은〉에서 한 탄핵지지 집회 사회자의 권양숙 여사 관련 발언을 보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경우 〈신강균의 사실은〉이 집회 사회자의 발언을 녹화한 그대로 방송했는가 초점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언론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예: 중앙일보, 2004.4.12, A12). 즉 언론이 취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논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신문의 공격은 ‘객관성의 실패’가 아닌 ‘객관성의 의도적 위반’을 문제 삼았다. 즉 취재한 그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 편파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4월 1일자 사설에서 문제의 프로그램을 지적하며 “방송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편집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방송이 내세우는 ‘편성권’이란 편파방송을 가리는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기본적으로 서로 진의를 의심하고 서로 반대편이 편파적임을 공격하는 데 이골이 난 우리 언론에게 있어서 ‘있는 그대로, 취재한 그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이란 비판은 약하게 느껴졌던 것일까?

2) 중립성/불편부당성

중립성(neutrality) 또는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들어 언론 비판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원래 중립성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이다. 자유주의의 근본 원리는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나 이해 추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어떤 집단에 편을 들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상과 가치가 비록 논란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이상과 가치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자유주의 체제의 평화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립성은 동시에 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즉 자유주의자가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이 보유한 이상과 가치에 대한 불개입성을 강조할수록 다음과 같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어떻게 중립성과 같은 이상과 가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와 화해할 수 없는, 때로는 그와 정반대되는 ‘당파성’과 같은 이상과 가치를 주장하는 자나 집단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는가. 반자유주의자가 보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립성이란 스스로 신념의 부족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기만의 모순을 범하는 것 둘 중의 하나를 뜻할 뿐이다(Lamore, 1987).

중립성은 정책적으로 적용될 때, 불편부당성의 원칙으로 구체화되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불개입과 균형이라는 하위 개념이 포함된다.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다자간 이해관계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균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구’로서 불개입이란 대안을 택하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경우 이를 탐색하고, 조사하고, 정보적 표현물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래적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불편부당성 원칙의 현실적 적용 방안으로 주로 균형 전략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념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략이다. 무엇보다도 균형은 불균형 또는 편파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편파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즉 상대방의 입장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자신의 입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서는 곤란하므로 갈등하는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관점에 따른 기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점의 존재는 물론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관점에서 기준점을 찾기 어렵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독자가 거의 대부분의 한겨레 기사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며 한겨레 독자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일보 기사가 편파적이라고 외면할 때, 두 독자집단은 사실 편파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수행되는 중립성 및 편파성 논쟁은 흔히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편파를 문제 삼는 비판 자체가 다시 편파성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혹은 위와 같은 접근 방법과는 달리 기준점을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구성하는 일종의 조절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국 만족스럽지 못하며 또 다시 편파성 시비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언론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의 기사가 어떤 주관적 평가나 견해도 없이 무색무취하게 사실만 나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양시양비적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준칙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은 한 지면에 한 기사는 이 편을 들고 다른 기사는 다른 편을 드는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파의 이해를 따르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정파의 이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균형이 정량적인 균형이 아니라 가치적인 것이라면, 가치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또한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조절 및 재구성을 위한 준칙의 선택은 어떤 것을 채택하더라도 일시적이며 수단적일 뿐 결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종국적인 결과는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편파 논쟁을 가속시킨다.

역사적으로 언론에 적용되어 유지되고 있는 중립성 개념 가운데 영국의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이 있다. 영국방송공사(BBC)가 지도적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개념 역시 구체적인 현실에서 적용될 경우 다양한 고려사항을 동반해서 판단되는 일종의 포괄적 지침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창근(2004)에 의하면, 불편부당성은 처음에는 방송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해 정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언론에 대한 부정적 규제의 함축을 지녔다. 구체적으로, 영국방송공사 초창기에 가해졌던 '논쟁적 사안에 대한 개입 금지'와 '논평 금지'가 바로 이러한 고전적인 부정적 규제의 사례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1954년 영국 방송법에 포함된 이후, 논쟁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일지라도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조절적인 균형 전략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듯 불편부당성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조절적 균형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에는 '언론이 모든 논쟁적인 사안에 절대적으로 불편부당(true impartiality)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받아들이는 역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의 불편부당성은 진실성,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일정한 지도적 이념과 가치에 종속되며, 그것도 영국적 의회 민주주의 체제의 질서와 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논쟁적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특수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결국 '적절한 불편부당성'은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참조적인 개념이지 모든 구체적인 당파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금석은 아닌 것이다.

‘적절한 불편부당성’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산술적 중립성’ 또는 ‘기계적 중립성’을 극복하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일부 평가자들은 언론이 ‘산술적 중립성’ 또는 ‘기계적 중립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이 경우 진정한 문제는 언론이 기계적 중립성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계적 중립성 자체를 엄밀하게 규정하지조차 못하는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립성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적용가능한 중립의 기준’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편부당성을 포함한 중립성에 대한 강한 주장은 흔히 다시 저열한 편파 시비의 대상이 되고 만다. 언론은 모든 논쟁의 당사자를 만족시킬 만한 중립성의 기준이나 균형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계적인 것이든 아니든) 그에 따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편파와 중립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에 대해 갈등하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불만족스런 갈등이 증폭되는 한 균형과 중립 그리고 불편부당함은 역시 규제적 이상/이념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항상 동요하는 이상/이념으로 남게 된다.

3) 공정성

객관성이 아니고 중립성도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에 공정성 개념이 이용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 나는 복잡한 결과지에 대한 논의를 피해 ‘공정성’(fairness) 개념을 일단 ‘담론의 공정성’(fairness in discourse)으로 제한해서 사용한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히 발전된 개념은 이 글의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담론의 공정성을 한 담론 구성자의 담론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대상의 목소리가 그 담론의 구성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공정성을 정의하면 이는 ‘공정함의 상태’를 어떤 표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는 텍스트의 표상에 구현되는 공정성도 아니고, 텍스트의 전달에 의해 결과적으로 구성되는 현실의 공정성도 아니다. 담론의 공정성은 그 공정함의 평가 조건을 담론 구성자와 그 담론의 영향력에 속하는 또 다른 주체의 관계로 제한한다. 따라서 이 관계적 공정성이 확보되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관계 당사자가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언론이 부안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보도하려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 언론의 공정성은 그 보도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여론의 변화 및 정부 정

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 즉 부안 주민 및 관계자의 목소리가 기사에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정성 문제는 언론의 부안지역 핵폐기장 유치 보도에 대해 부안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충분히, 왜곡 없이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 본 후에 결정될 수 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담론의 공정성 평가는 질적인 차원과 양적인 차원을 동시에 포함한다. 즉 부안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가 공정성의 직접적인 훼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질적인 기준이 된다. 동시에 목소리의 반영에 있어서 양적인 정도의 문제가 개입한다. 즉 부안 주민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정당하게(의도에 충실하게), 충분히(부족함이 없이), 왜곡 없이(부안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 등을 사실과 같이) 반영되는가의 문제가 별도로 제기된다.

이 단계에서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담론의 공정성 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시민이라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부당성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제기의 내용이 곧 공정성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공정한 검토의 요구는 시민의 도덕적 능력, 즉 '선'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능력(the capacity for a conception of the good)과 정의감을 형성하는 능력(the capacity for a sense of justice)에 기반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Rawls, 1993). 민주적 시민이라면, 이러한 도덕적 능력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이 무시당하거나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대변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담은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 또는 '부정의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신이나 그 대리인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바로 그 당사자나 그의 대리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곧 담론의 공정성을 구성한다. 나는 이러한 담론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화되어 하나의 기본권을 구성하며, 이는 동시에 다른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권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담론의 공정성이 민주적 시민의 도덕적 능력을 전제한다는 관점은 시민의 현실 정치적 경험에 대해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인식은 시민들의 분노, 염려, 무기력감, 냉소감 등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회복을 위한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담론의 공정성을 담론 주체와 담론의 영향력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주체의 관계로 볼 때, 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시민의 '정의감'(sense of justice)이라는 전제로부터 유래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적 담론의 본질이 바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념을 가진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 제기하는 ‘공정성 요구’라고 본다. 즉 언론이 생산해내는 담론의 영향권에 속하는 개인, 이해 집단, 지역민, 계층 등이 언론의 담론에 자신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음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 언론의 위기는 공정성 위기이다. 그리고 이는 공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지 않는 언론에 대해 분노하거나 염려하고 언론의 수행성(performance)을 비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객관성 비판과 편파성 비판도 사실상 그 동기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 축적된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속한 공중의 공정성 요구가 폭발한 데서 일부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즉 왜 시민들은 갑자기 언론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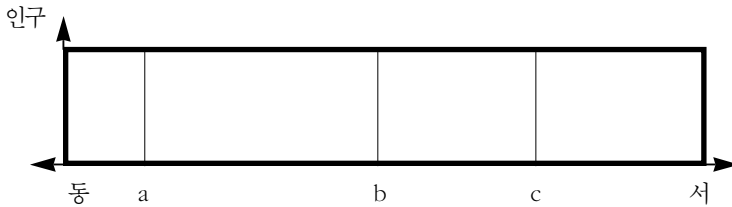
3. 분석: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

이 글의 핵심적인 논지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본질은 바로 시민의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는 새롭게 등장한 ‘비판적 담론 공중’(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사회정치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담론 공중의 특성과 그들의 공정성 요구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우리 언론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비판적 담론 공중이란 누구이며 이들은 왜 언론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한국 사회의 비판적 담론 공중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 구성과 변화에 대한 분석적인 모형이 필요하다. 여기에 호텔링(Hotelling, 1929) 등이 제시한 공간입지론이 도움이 된다.

호텔링 등이 고전적으로 정식화한 공간입지론에 의하면, 동일한 인구분포를 갖고 있는 동서로 난 거리에서 상점들의 입지는 거리의 중간 지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중앙에 가까운 쪽에 입지한 상점(예컨대 <그림 1>의 b의 경우)은 동서 양쪽에 치우친 위치에 입지한 상점(a 혹은 c의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점들은 경쟁적으로 중앙으로 입지하기를 원하고, 결국 상점들은 정확히 중간 지점을 중심으로 서로 이웃하며 위치하게 된다. 이 이론은 도시 중심에 동일 업종 상점이 밀집 분

포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또한 이를 정치적 맥락에 적용시키면, 어렵지 않게 다운즈(Downs, 1957)의 양당제 하에서의 두 정당의 중도주의적 선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동, 서가 각각 진보, 보수적 이념 성향이 되고, 세로축이 유권자의 수이며, a, c가 좌익과 우익 정당을 나타낼 경우, 두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도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국 양당의 정책적 차이는 최소화된다. 다시 말해서, 그림과 같이 유권자가 진보와 보수에 고르게 균점되어 있거나 혹은 새로운 중도적인 유권자가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기존의 이념정당 성격을 떠난 a와 c 두 정당은 최대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도적인 정강·정책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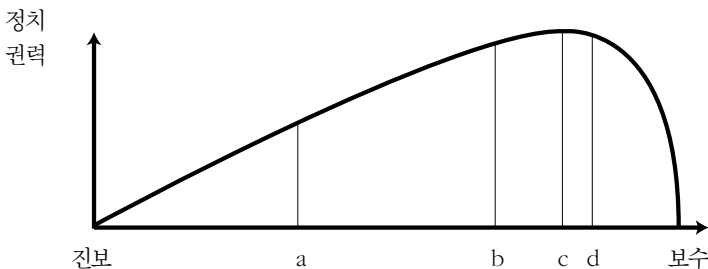
동일한 논리에서 〈그림 1〉은 보수 - 진보 스펙트럼을 따라 독자가 균등하게 분포하는 사회의 경우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두 대중적 또는 상업적 언론의 논조는 장기적으로 당파적 속성을 버리고 중도적인 경향을 띠게 될 것을 예측한다. 광고와 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상업 언론은 물론 대중적인 공영 언론도 잠재적 수용자의 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진보 - 보수 성향의 독자가 동일한 정도로 분포한 경우 (즉 〈그림 1〉의 동 - 서가 진보 - 보수의 축이며, 세로축이 잠재적 독자의 규모라면), 언론은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당파적인 입장을 떠나 중도적인 논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의 1830~60년대 대중지인 페니 프레스(penny press)의 등장과 이에 따른 당파지의 몰락과정은 위에서 제시한 설명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Schudson, 1978; Schiller, 1981). 즉 미국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직공과 소상공인의 등장에 따라 과거 미국 언론의 주요한 독자이며 동시에 이념적 지배자였던 귀족주의적 당파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고가의 신문들을 대신해서 페니 프레스가 등장했다. 이 페니 프레스의 결

정적인 특징은 정당 후견주의를 버리고 대중적인 취향과 정치적 중립주의에 호소하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는 점이다. 결국 대도시에 광범위하게 유입된 대중이 잠재적인 독자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상업적 수익에 관심이 없는 당파지(대중적 독자기반에 관심이 없거나 독자적인 재원을 갖고 있는 당파지)가 아니라면, 광고수입과 정기구독에 의존한 대중지는 정파를 불문하고 이념적 성향을 버리고 중도적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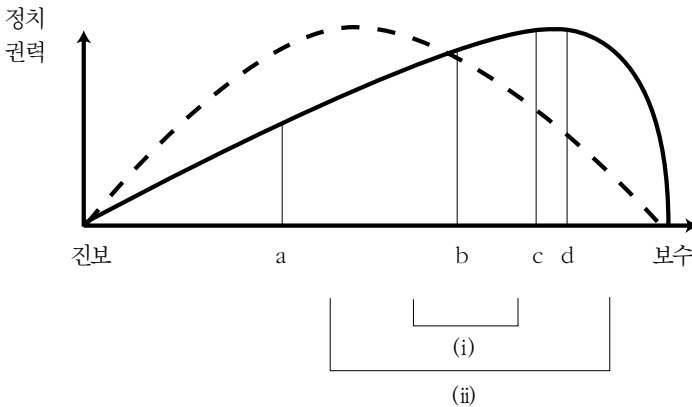
〈그림 2〉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이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경우, 권력의 분포에 민감한 언론들이 이념적 입지를 설정하는 상황을 모형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사회의 정치적 권력이 우경화되어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을 경우, 즉 〈그림 2〉의 실선과 같이 정치권력이 분포한 경우, 권력에 민감한 언론사들(예를 들어, 〈그림 2〉의 b, c, d의 경우)은 보수적인 지점에 입지하게 될 것이며, 소수의 대항적 언론사만이 진보적인 지점에 위치할 것이다(예컨대 a).

이러한 설명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이었던 정권하에서 권력의 대리인 또는 권력의 일부로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던 우리나라 주류 언론의 정치 공간적 입지 과정을 보여준다. 가정을 완화시켜, 〈그림 2〉의 세로축이 정치권력의 분포가 아닌 경제적 기대수익 또는 자원의 분포라고 봐도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과거 정치적 반공주의와 더불어 성장주의적 전략을 채택했던 시기의 기대수익과 자원은 〈그림〉과 같이 분포했으며, 한국의 주류 언론은 최대 이익과 자원의 활용을 노려서 그림과 같이 위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설명들은 최근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신문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한 의문, 즉 왜 주류 언론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권력이 우경화되어 불균등 분포하는 상황에서(동시에 경제적 자원의 분포도 〈그림 2〉의 분포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분포를 보일 경우에는 더욱 더), 권력지향적 언론들은 여론의 권력 지배를 노려서 보수적인 논조를 띠게 된다.



〈그림 2〉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의 권력분포가 이념적 성향을 기준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정치권력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진보 - 보수 척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진보적 편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의 분포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정치권력의 분포이면서 동시에 경제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면, <그림 3>은 지난 10년 간 정치적 권력의 분포의 변화를 도시한다. 즉 지난 10년 간 한국의 정치권력은 실선의 분포에서 점선의 분포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림 3>

5) 물론 이러한 정치권력 분포의 변화는 근본적인 한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한국 사회의 계급 구성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연관지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력 분포의 변화는 지명하게 관찰되는 바이지만 이것과 한국 사회 계급 구성 및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와의 관계는 지명하지 않다. 이 관계성에 대해 논의와 더불어 세심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を 표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언론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권력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의 정치적 정향점이 현실의 권력 분포의 균형점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는 기존 언론의 이념적 입지와 다른 위치를 보이는 정치적 입장을 지니는 공중이 광범위하게 형성됨을 의미한다. 나는 비판적 담론 공중(critical discursive publics)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권력의 분포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지형이 변화하는 데에 대해 주류적인 보수 언론이 비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언론의 이념적 정향과 다른 정치적 정향성을 갖고 있는 공중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일단 우리 사회의 정치적 권력 변화를 주도한 진보적인 공중들은 권력 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언론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여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비탄력적인 보수적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결국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격렬하게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보수적인 시민들에게도 이유는 다르지만 언론에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한다. 보수적 시민은 기존에 자신들이 누리던 정치적 권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데 위축되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가 점차로 적어진다는 위협을 받는다. 사실 안티조선 운동을 비롯한 이른바 ‘조중동’ 주류 언론에 대한 진보적 정치세력의 공격은 그 자체로 담론 투쟁을 구성하며, 이는 보수적 시민의 담론적 입지 근거를 흔든다. 다시 말해서, 진보적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발생했다면 보수적 공중은 자신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신의 담론적 입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한다. 즉 비판적 담론 공중은 ‘좌’에서 뿐만 아니라 ‘우’에서도 동시에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위의 분석은 시민의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보수적 주류 언론이 정치적 권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수 언론이 권력 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보수 언론은 지난 10년 간 정치 권력의 분포는 변화했지만, 상업적 또는 대중적 언론의 물적 토대인 경제력 또는 언론시장의 구매력의 분포는 아직 〈그림 3〉의 실선과 같이 분포한다고 믿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최대이익을 노리는 상업적 보수 신문은 이념적 위치를 쉽게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과거 보수 언론은 정치 권력의 분포에 따라 이념적 입지를 결정했던 것, 즉 보수 이념을 표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권력 추구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보수 언론의 이념적 성격 자체가 언론사의 정치적 정체성이 되면서 이를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언론사가 담론을

생산하며 자신의 담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보수 언론의 비판력성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주류 언론 이외에 새로운 언론이 권력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해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광범위한 대안적 또는 대항적 언론이 등장한다. 첫째, 이 새로운 언론이 '대안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언론 매체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토대와는 다른 토대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안적 언론은 과도하게 높은 언론 시장의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수용자 전략으로 무장하고 언론 시장에 등장했다(문종대, 2004). 둘째, 새로운 언론이 '대항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론이 주로 기존 주류 언론의 정치적 이념적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의 지배적 담론 자체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수의 언론인이 집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공중을 관리하면서 대항적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항적 언론사의 대항적 담론에 대해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담론 권력을 누렸던 보수적 공중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국 '비판적 담론 공중'은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이유로, 즉 전자는 위협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후자는 주류 언론의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로 등장하게 된다.

이상의 설명은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이 정치권력의 변화와 그에 대한 언론의 대응(보수 언론의 비판력적 대응과 대항 언론의 탄력적 등장)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림 3>에 근거해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언론까지 전반적으로 공정성 시비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들 수 있다. 우리 언론의 정치적 입지의 폭, 즉 정치적 다양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 언론의 문제성은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방향으로 정향되었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언론의 정치적 입지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에 의해 가중된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b 언론사의 경우, 이념적 중심입장은 b에 위치하지만 기사가 커버하는 정보와 해석의 폭이 (i)과 같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도 있고, (ii)와 같이 상대적으로 넓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언론은 진보든 보수든 흔히 (i)과 같은 협소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b 언론사의 이념성이 (ii)와 같은 폭, 즉 정치적 이념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 언론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언론은 우편이든 좌편이든 그 이념적 당파성이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언론사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협소해졌다는 것 또한 우리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폭증하게 된 한 원인이 된다.

1) 비판적 담론 공중의 성격

비판적 담론 공중의 성격은 현재 언론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 요구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준다. 그리고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담론 질서와 그것을 위한 담론 규범의 형성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성 요구가 단순한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서 발전해서 새로운 담론 규범의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준다.

과장을 섞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은 18세기 초 유럽의 살롱과 커피하우스 등 공적 토론 공간을 중심으로 등장한, 독서하는 부르주아 공중(the reading public)의 등장 및 19세기 초 미국 동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등장한 평등주의적이며 시장주의적인 중산 계층의 등장에 비견할 만하다. 물론 한국의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시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비견할 만하다’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실제 등장한 공중의 규모나 그에 따른 역사적 변화의 내용과 파급력에 있어서 비견할 만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대중 매체의 등장과 전파에 따른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때, 비견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18세기 유럽의 시민적 공중은 시민적 계급의 축적된 경제적 부를 토대로 혁명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 달성하고 문화적으로 계급지배를 이루었던 공중이다. 이들 시민적 공중은 신문, 팜플렛, 서적 등 새로운 언론 매체를 통해 제시되었던 공적인 사안에 대해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토론’이라는 지배적 담론 규범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Habermas, 1989). 그런가 하면 19세기 초 미국의 시장주의적 중산계층 역시 계층적 토대를 갖춘 것은 물론 대중적 구매력을 근거로 시장적 질서를 확립하면서 정치적으로 평등주의적이며 공동체주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이념적으로 경험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가치를 확립했다. 이들은 미국 동부 대도시의 평등주의적이며 시장주의적 이념을 확대시킨 주역이며, 결정적으로 범죄·선거·노사쟁의 등 공적인 사안에 대해 값싸게 정보를 제공했던 19세기 초 미국의 대중지의 등장 및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Schudson, 1978).

우리나라의 비판적 담론 공중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게시판, 댓글 공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 새로운 토론의 장을 통해 등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정치적 읽기와 쓰기의 능력을 단련하고 이의 정치적 효능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각성

되어 있고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판적 담론 공중은 자기 자신 및 그 대변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논쟁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뿐, 아직 어떤 담론의 질서를 확립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그리고 언론에 대해 공정성을 요구할 뿐, 스스로 공정한 담론의 규범을 내면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판적 담론 공중은 현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응해서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담론을 산출할 뿐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는 정당한 담론, 혹은 민주주의적 토론의 규범을 지키는 담론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무규범성과 반칙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토론자 가운데 다수는 대화하지 않고 선언하거나 독백하며, 대화를 할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인터넷 토론 공간은 흔히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채워지며, 상대방에 대한 지칭은 ‘수구 꼴통’과 ‘노빠’와 같은 이념성에 대한 비난 (the critics of ideological biases), ‘초딩’, ‘찌질이’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비판(the critic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그리고 ‘알바’와 같은 진정성에 대한 비방(the critics of sincerity)으로 대체된다. 인터넷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는 정치적 분노와 염려와 같은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 제안과 논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담론을 통해 요구하고, 투쟁하는 자들이지만 관용적이며, 절차적이며,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판적 담론 공중은 약 100만~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 그리고 김은미와 이준웅(2004)의 자료를 근거로 보았을 때, 그들은 약 67%가 남자이고, 연령별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40대 이상과 50대의 인구도 고르게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로 진보, 중도, 보수를 모두 포함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약 50%가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했고 약 20%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⁷⁾ 비판적 담론 공중의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보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점이 이들의 사회

6) 2004년 11월 전국 1,500명 성인남녀를 표본으로 조사에서, “(토론 게시판 글쓰기를 포함) 인터넷으로 정치/시사 관련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약 10%였다. 이를 근거로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추정하면, 전체 인구 중 약 200만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통계치는 이와 유사한 질문을 통해 얻은 다른 자료에 나타난 인터넷 토론 참여자의 비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예컨대, 2004년 언론재단의 <수용자의식조사>에서 인터넷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성인남녀 1,200명 중 약 25%에 달했다.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을 한다면, 비판적 담론 공중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치적 속성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기초로 이들의 사회정치적 특성을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비판적 담론 공중이 ‘비판적’(critical)인 이유는 기존의 정치 세력의 담론적 권위에 공공연히 도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언론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자가 그들의 삶과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도전한다. 비판적 담론 공중은 기존의 언론을 포함한 기존의 지배적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체성을 획득했다. 즉 이들은 기본적으로 저항하고,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회피하는 공중이다. 이러한 저항, 대결, 비판, 회피를 통해서 그들은 정치적 공격 및 방어와 같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일정한 성과를 이룬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담론의 규범은 물론 상호적으로 준수할 만한 담론의 규칙, 특히 공정한 담론의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은 서로 담론적으로 대항하고 투쟁하고 있을 뿐 그 담론적 질서의 화해론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비판적 담론 공중이 ‘담론적’(discursive)인 이유는 이들이 담론적 실천을 수행하는 공중이며 담론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요컨대 인터넷에서 정치적인 읽기와 쓰기를 통해 스스로 교육하고 성장한 집단이다. 인터넷의 기술적 발전과 광범한 인터넷 리터러시의 확립은 과거 우리나라의 어느 역사적 맥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민적 실천 양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시민적 실천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적 담론을 매개로 전개되며, 결정적인 순간에 시민적 참여로 진화하기도 한다. 비판적 담론 공중은 신문도 읽고 방송뉴스도 보지만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고 정교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배양했다. 이들이 여러 채널의 언론에 동시에 접하는 이른바 ‘다중적 매체 이용자’인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각 언론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은 언론에 반영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에 입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정보를 소비하는 데 주력했던 이들은 게시판의 글쓰기나 토론방의 대화를 통해서 급속하게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치적 담론적 실천의 능력(competence)과 효능성(efficacy)을 획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의 다양한

7) 김은미, 이준웅(2004)의 연구결과에 2004년 총선거간 동안 ‘다음’ 포털의 ‘총선 핫 이슈 토론 광장’이라는 토론광장에서 활동한 36,486명의 토론자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얻은 것이다.

지역에서 읽기와 쓰기를 훈련한 이들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자각하고 이를 담론적 실천을 통해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여론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비판적 담론 공중은 담론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동원된 여론’을 구성한다(Bourdieu, 1979).

셋째, 비판적 담론 공중이 집합명사인 공중(the public)이 아니라 복수의 ‘공중들’(publics)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의 계층적, 지역적, 직업/직능적 기반이나 강력한 이념적 공감대를 갖추고 있지 못한 공중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불특정하고 상호 공유된 특성을 찾을 수 없는 대중(mass)이라고 보기에는 이들의 정치적 능력 및 효능성과 정치적 행위의 특성이 도드라져 보인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공중으로서 각 집단 나름대로 성적, 연령적, 지역적, 계급적, 직업/직능적, 이념적 특성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성질은 위에서 언급한 ‘비판적 능력’과 ‘담론적 실천’ 이외에 이렇다 할 것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비판적 담론 공중은 18세기 유럽의 시민적 공중과 다르며 19세기 미국 대도시의 중산계층과도 매우 다르다. 전체 집단으로서 비판적 담론 공중이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면 비판적 성격, 담론적 구성, 그리고 다양성과 복잡성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입장과 유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유대성을 형성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정체성과 유대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간과 공간은 제한적이다. 나는 비판적 담론 공중이 계급적, 지역적, 직업/직능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념적 유대성도 느슨한 것은 아마 이들이 현실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배적인 담론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이들은 아직 부정적인 계기에서 형성되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유지되는 공중들이나 것으로 보인다.

2) 공정한 언론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담론의 공정성이란 ‘한 담론이 갖는 영향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체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그 담론의 구성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발화가 다른 사람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그는 자신의 담론에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담론의 공정성 개념은 일반화를 통해서, 즉 담론적 실천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아니라

상호작용적 담론적 실천에 참여하는 공중 개개인의 집합에 적용되면서 보편적인 공정성 개념으로 전화될 수 있다. 일단 담론의 영향력에 포함되는 다른 주체를 염두에 둔 담론적 공정성의 개념은 두 사람의 대화적 맥락에서 양방(dyadic) 의사소통의 규범으로 전화한다. 또한 담론의 공정성 개념은 다자간의 공적인 토론의 맥락에서 공중의 일반화된 의사소통 규범의 하나로 확대된다. 나는 이렇게 ‘일반화된 담론의 공정성’이 유용한 대화와 토론의 공정성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개념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경우,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나누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이 그 담론에 모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공정성의 개념은 따라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를 나누는 이해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appropriately) 포함시키고, 각 당사자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그래서 토론에 참여한 각 개인의 담론적 목적이 충분히(adequately) 실현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지향성이 완성된다는 것은 곧 적극적인 의미에서 토론을 통한 공적 자유(public freedom)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정성의 개념은 어떤 개인의 정치적 발화의 자유(즉,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부정적 자유, 다시 말해서 ‘국가 등 권위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로 해석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언론의 자유로부터 구분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부정적 자유의 개념은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중립성이나 불편부당성과 같은 소극적 의미의 담론 규범을 산출한다. 그리고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자유주의적 중립성 개념은 규제적 이념으로만 기능할 뿐,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구체적인 정치적인 논쟁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제로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담론의 공정성 개념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 담론적 실천에 참여하는 각 개인이 상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소통에 대한, 소통을 위한’ 규범이다. 이는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사용의 정당화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고안된 의사소통의 규범이다. 이러한 일반화된 담론의 공정성 개념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이 더해지면 더욱 구속력 있는 이론을 구성할 수 있다.

첫째, 공정성 규범의 형성에 있어 담론적 실천에 참여하는 개인, 집단, 기구 등은 정치적·도덕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가정된다. 즉 각 주체는 다른 누구와 더불어 논의하고 논쟁하고 설득할 때, 그 자신이 그러하듯이 다른 개인, 집단, 기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토론의 상대가 나름대로의 선에 대한 가치관을 지니며 정의관을 지닌 도덕적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토론은 일종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당한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대결과정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협동 과정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가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대화의 상대가 적, 그 자체라면 대화하거나 토론하지 않는다. 또는 대화의 상대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도 대화하거나 토론하지 않는다(형식적으로 대화와 토론이 있더라도 ‘진정으로 대화 또는 토론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상대가 정치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토론의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토론에 참여한다.⁸⁾

둘째, 대화 및 토론의 주제는 합당한(reasonable) 것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Rawls, 1993/1998). 일찍이 벌린(Berlin)이 주장했듯이 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가치와 개념의 집합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까지 모든 담론의 규범을 적용할 수는 없다. 사실 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용되는 가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가치나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예컨대 카니발리즘이나 근친간)의 정당성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 또한 사적 경험의 고백(예컨대 개인의 시적 경험이나 종교적 계시)에 대해 공적인 토론의 규범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안은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적인 논의의 규범의 적용 대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담론적 실천의 주체는 토론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서 재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흔히 토론에 앞서서 전제되는 것이며 또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해 공적인 논의가 일단 시작되었다면, 그 토론의 주제는 합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정치적, 도덕적 능력을 지니는 토론의 주체는 무엇이 합당한지 또는 무엇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된다.

위의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 공정성 개념은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모순이 없다. 언론의 공정성 이론과 위의 가정들은 필요한 변용을 가해서 롤즈(Rawls, 1971)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에 포함된, 이른바 정의의 두 원칙과 조응하는 ‘언론의 공정성 원칙들’로 재구성할 수 있다. 언론의 공정성을 염두에 둔 개인이 모든 공정한 담론의 원칙을 산출하는 과정은 정확하게 롤즈가 정식화한 원초적 입장과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황 및 원칙 도출의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언론의 공정성 이론은 (1)

8) 이 논점은 인터넷 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정적 담론 전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터넷 공간의 비난, 비방, 욕설, 헐방(예컨대 도배) 등과 같은 탈규범적 부정적 담론 전략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전략은 상대방의 능력(communication competence)과 진정성(sincerity)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대화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자이거나 혹은 진정하지 못한 의도를 지녔다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상호작용의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매도는 흔히 ‘초딩’ 또는 ‘찌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진정성에 대한 매도는 흔히 ‘알바’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누구라도 상대가 ‘초딩’ 또는 ‘알바’라면 더불어 공적인 사안에 대해 대화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언론 자유의 권리에 대한 평등한 주장, (2) 공론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의 보장, 그리고 (3) 차등한 담론 권력의 조정 등과 같은 원칙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조응한다.

롤즈가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언론 자유의 평등한 주장’의 관계와 제2 원칙의 ‘기회 균등의 원칙’과 ‘공론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의 보장’의 관계는 특별히 상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롤즈가 제시한 두 원칙의 의미가 자명하기도 하며 언론의 공정성에 적용된 첫 두 원칙들은 바로 이 두 원칙의 커뮤니케이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차등의 원칙’과 ‘차등한 담론 권력의 조정’의 관계는 자명하지 않다. 전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정되는 한에서 그러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의 커뮤니케이션적 변용이 무엇인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나는 바로 이 차등한 담론 권력의 조정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시켜서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적 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사회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개인, 집단, 세력에 비해 더 많은 담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개인, 집단, 세력이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개인, 집단, 세력의 유산, 능력, 학습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편재하는 담론 권력을 구성한다. 즉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발언의 기회를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청중을 동원하며,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런 담론 권력의 불평등이란 사회적으로 가장 담론 권력이 적은 개인, 집단, 세력의 목소리가 그 불평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즉 ‘권력의 조정’이 의미하는 바는 현존하는 담론 권력의 불평등이 최소 권력자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 권력의 조정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관이 바로 ‘언론’이 된다. 언론은 그 자신이 고유한 담론 권력을 지니며 이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력을 지닌 언론이 인정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편재하는 담론 권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 집단, 세력은 다른 개인, 집단, 세력에 비해 더 많은 담론 권력을 차별적으로 누리는데, 언론은 여기에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담론 권력을 덜 누리는 개인, 집단, 세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다시 말해서 언론의 담론 권력이 없다면 최소 권력자의 담론 권력은 더욱 더 약화되어 사회적 논의나 정책 결정과정에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사회적 강자, 즉 더 많은 발언권, 더 많은 청중, 더 많은 영향력을 누리는 개인, 집단, 세력의 목소리보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조건 하에서만 ‘언론의 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언론의 공정성’ 개념과 ‘일반화된 담론의 공정성’ 개념은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에 위치하지만 서로를 지지한다. 전자는 공정성의 구조적 조건을 규정하고(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것) 후자는 공정성의 내용적 특성을 규정한다(누구든 영향 받는 담론 대상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해당 담론에 반영될 것). 나는 이렇게 개념화된 ‘언론의 공정성’과 ‘담론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의 하나로 수용되고 행사되지 않는 한, 비판적인 담론 공중의 공정성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담론의 규범을 포함한 새로운 담론 규범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토론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비판적 담론 공중은 계속 실망하고, 분개하고, 불평하고, 저항하는 공중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실망, 분개, 불평, 저항만을 주로 하는 비판적 담론 공중이란 한낱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부정적인 공중일 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고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기 어려운 집단이 될 뿐이다.

4. 결론을 대신함: 언론의 공정한 공론장 형성 및 유지

현재 우리 언론은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비판적 담론 공중의 공정성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시달림의 원인이 바로 언론 자신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언론은 그 내용이 다양한 계층, 지역, 직업, 이념집단, 이해집단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의 담론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이념적으로 비탄력적이고 동시에 폭이 좁은데, 이 역시 언론에 대한 공정성 시비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역시 언론과 공중 모두 이념적 상대를 찾아 부정적인 공격과 비판만 일삼을 뿐 정당한 담론의 규범을 산출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나는 이러한 실패가 계속되는 한 우리가 겪을 것은 끊임없는 이념적 투쟁의 악순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실 언론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적 담론의 내용이 ‘객관성’, ‘편파성’, ‘공정성’ 등과 같은 언론에 대해 요구되는 기본적 가치라는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어떤 긍정적인 계기도 담당하지 못하며 자신의 존재 방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직면해서도

언론이 정치적 쟁론의 조직자가 되고, 상호비판을 통해 발전하기는커녕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고, 계속해서 신뢰를 훼손한다면 이는 정녕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우리 언론이 민주적 담론 질서가 확립된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성과 담론의 공정성 개념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특히 언론은 ‘평등한 언론의 자유’, ‘공론장에 대한 접근 보장’, 그리고 ‘차별적 담론 권력의 조정’ 등과 같은 원칙으로 구체화되는 언론의 공정성을 현실에서 구현해야 한다. 물론 언론이 이러한 공정한 담론의 규범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하지 않다. 언론은 공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언론은 다양한 개인 또는 사회집단이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보다 넓은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은 서로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갈등하고 투쟁하는 비판적 담론 공중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 형성한 공정한 담론 규범을 자신의 정치적 담론 행위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확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담론 규범의 형성과 관련해서 어떤 별도의 규범적 전제도 사전에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이념적 전제도 미리 가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에서 미리 전제되는 규범과 전제가 따로 있을 수 없다(이준웅, 2000). 다만 담론 규범의 리스트와 그 내용 자체가 담론에 참여하는 개인, 집단, 세력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내생적으로 구성되고 그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규범이 무엇이 될지 사전에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규범의 적용되는 내용 영역이 대략 (1) 공공성과 사적 영역의 경계 설정, (2) 발언 기회의 평등한 보장, (3) 규칙 형성적 담론의 필요성, (4) 토론자의 절차적 원칙의 도출과 준수, (5) 상대방에 대한 관용, (6) 공론장의 유지 및 재생산, (7) 존재 부정적 복수 행위의 금지 등과 관련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시 짐작일 뿐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2005). 언론, 이렇게 변해야 한다: 언론이 당파성. 《신문과 방송》, 1월호, 43~48.
- 강명구, 양승목, 엄기열 (2001). 한국 언론의 신뢰도: 위기 현황 분석과 극복 방안. 한국언론재단.
- 권혁남 (2003). 방송 3사의 16대 대선보도 공정성 분석. 《16대 대통령 선거의 언론 보도에 관한 종합 평가》. 한국언론학회.
- 김은미, 이준웅 (2004).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토론 공간에 대한 소고. 《전환기의 한국 언론》. 한국언론학회.
- 문종대 (2004). 한국 방송 저널리즘과 정치: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6권 1호, 83~109.
- 우승용, 이준웅 (2002). 선거보도와 정치적 냉소주의: 2002년 대통령후보 경선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 양승찬 (2003). 16대 대선 신문 여론조사보도, TV토론 보도, 사설분석. 《16대 대통령 선거의 언론 보도에 관한 종합 평가》. 한국언론학회.
- 이민웅, 윤영철, 윤태진, 최영재, 김정모, 이준웅 (2004). 《대통령 탄핵 관련 TV 방송 내용분석》. 한국언론학회.
- 이재경 (2004). 한국 저널리즘의 세 가지: 저널리즘의 위기와 미래. 《신문과 방송》, 4월호, 240~246.
- 이준웅 (2000). 공영방송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시론. 《방송문화연구》, 12 호, 165~190.
- 이준웅 (2002). 캠페인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 이준웅 (2003). 2002 대통령 선거 캠페인 보도 평가. 《16대 대통령 선거의 언론보도에 대한 종합 평가》. 한국언론학회.
- 이준웅 (2005). 한국 언론의 공정성 및 신뢰성 평가. 《국민에게 신문은 어떤 존재인가?》. 한국언론학회.
- 이창근 (2004). 적절한 불편부당성 기준의 역사와 성격에 대하여. 《방송문화연구》, 16권 2호, 199~228.
- 최영재, 홍성구 (2004). 언론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6.

- Ettema, J. S., & Glasser, T. L. (1998). *Custodians of conscience*. New York: Columbia Univ.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 Burger (T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Hotelling, H. (1929). Stability in competition. *Economic Journal*, 39, 41~57.
- Lamore, C. E. (1987). *Patterns of moral complex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chtenberg, (1991). In defense of objectivity. In J. Curran and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216~232). London: Edward Arnold.
- McQuail, D. (2000). *Communication theory*. 4th Ed.
- Mindich, D. T. Z. (1988). *Just the facts: How objectivity came to define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Putnam, H.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1993/1998). *Political liberalism*.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역). 동명사.
- Schiller, D. (1981). *Objectivity and the new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Basic Books.
- Schudson, M. (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 (2), 149~170.
- Tuchman, G. (1972).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Westerstahl (1982).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 (3), 403~424.

최초 투고일 2005년 10월 31일

게재 확정일 2005년 12월 12일

The Advent of ‘Critical Discursive Publics’ in Korea and their Demands for Fairness

June-Woong Rhee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essay explores the reasons for which Korean people recently raised ‘the demand for fairness’ of major Korean news institutions. The nature of the demand for fairness is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observations made about aggravating partisan editorships, increasing cross-criticisms among newspapers and broadcasting news, and declining trust in Korean journalism. An analysis employing Hotelling’s model of spatial competition reveals that the public’s demand for fairness can best be interpreted as a fight for fair representation of their voices in the mainstream media. It is suggested that the demand was raised by newly advent groups of political discussants in internet talk spaces such as bulletin boards, discussion groups, and personal blogs. The socio-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of discussants, so-called ‘critical discursive public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political roles in time of lowered public trust.

Key words: demand for fairness, Internet, critical discursive publics, the public sphere



관계형 매체 증가와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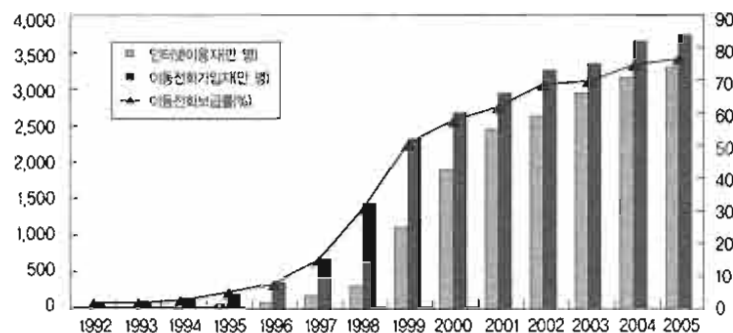
_ 이준웅(서울대 언론정보학과)

1. 문제제기: '매체 이용-의사소통-사회 변화'의 연관성

외환위기 전후인 1997년부터 약 5년간,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용자 집단의 비율도 증가했다. 아마도 후세는 이 시기를 한국사회의 '관계적 매체 이용 폭증의 시기' 또는 '의사소통 폭발의 시기' 라고 부르게 될지 모른다. 이동전화 가입자의 극적인 증가는 사적 영역에서 친교 유지, 업무 수행, 오락생활 등을 위한 매체 이용의 폭증을 보였다면,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는 사회집단 가입과 공적 토론 참가 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걸친 매체 이용의 확대를 보였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의사소통의 양이 폭증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이용자와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전형적으로 새로운 매체의 채택에 따른 개혁 확산의 패턴을 제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5 한국인터넷통계집』

* 이 글의 일부는 2006년 12월 8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21 사업단 주최 미디어와 민주주의 워크숍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글의 초고에 대해 토론해 주신 윤영철, 임영호, 유홍림, 이상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한국인터넷통계집」; 월간 「샘플러 이동통신」(1999. 2), p.44; 「정보통신정책」 17권 15호(2005. 8), p.5 등의 자료를 편집해서 재구성함.

그림 9-1. 연도별 인터넷 이용자 및 이동전화 가입자

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0년 1,900만 명을 넘었으며, 2005년 말 3,000만 명을 돌파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율은 1999년 최대 250%에 달했으며, 이즈음에 이동전화 가입자의 증가율도 최고조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완만해지면서, 2003년 11%, 2004년 8%, 2005년 5% 수준으로 점차로 줄었다. 이는 2005년 이후로 인터넷 이용인구가 사회적 포화상태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시기에 이동전화 가입자의 증가율도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여기에서 특히 1998년과 1999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이용자와 이동전화 가입자의 추세가 주목할 만하다.

우리는 왜 외환위기 직후에 이동전화와 인터넷 이용이 급증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아마도 1)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일어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확산, 2)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 산업진흥 정책, 3) 한국 통신기업의 시장 확대 및 마케팅 노력 등의 외적 요인들과 4) 외환위기를 경험한 시민들의 정보 욕구 및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의 증가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매체의 사회적 채택과 전파'에 대한 설명 모형을 제시하고 당대 자료를 수집해서 그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이란 역시 매체의 인식된 특성, 채택의 유형, 정보 채널, 사회체계의 성격, 주도자의 노력 등과 같은 알려진 설명 변수들 일부 또는 전부의 결합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ogers, 1995).

외환위기 직후, 이동전화와 인터넷 이용이 급증한 원인은 물론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겠지만, 이 연구의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 나는 이 두 매체의 이용 증가에 따라 어떤 사회적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묻고 싶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은 서적, 신문, 방송 등과 같은 전통적 매체와 비교해 볼 때, 대인적 상호작용을 돕는 '관계지향적 매체'라는 특성이 강하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이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역할과 관련된다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서적,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의 이용은 미리 매체 이용을 염두에 두고 생산된 매체 내용물을 소비한다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개인 간, 개인집단 간,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함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전통적 매체의 이용 시간 증가는 흔히 여러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박탈을 초래한다는 것이 일반적 관찰이다. 하지만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매체 이용이 곧 대인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인터넷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대부분이 개인 간 또는 집단 내 상호작용 경험 그 자체를 제공한다. 이런 특성을 지닌 관계적 매체의 이용 증가에 따르는, 또는 수반하는 사회적 변화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동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관계지향적 매체의 보급이 증가하고,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전체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변화는 한국사회 민주화와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지녔는가? 이 글의 목적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관계형

매체의 보급 증가에 따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의사소통 행위의 변화를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양식 등의 제 범주 개념을 이용해 탐색함으로써 1997년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주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에 대한 합의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이렇듯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양식 등의 범주를 기준으로 사회변화를 탐색하려는 의도는 '의사소통이 곧 사회 구성의 원리'라는 고전적인 명제를 전제로 삼기에 가능하다(Schramm, 1971).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양식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 출발한다. 그리고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이동전화와 인터넷 이용자 증가에 따라 나타난 세 현상, 1) 이동전화 이용 증가에 따른 사적 영역에서의 관계적 친밀성의 변화, 2) 인터넷 가입집단 활동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상호작용 규범의 형성, 3) 인터넷에서의 '읽고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효능감을 갖게 된 담론 공중의 등장 등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특히 이런 현상에서 관찰되는 의사소통 행위자, 의사소통 관계, 그리고 효과 등을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양식 등의 개념을 동원해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 민주화의 문제를 사회 변화의 주체인 공중의 형성 조건과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의 확립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2.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 민주화의 의사소통적 조건

이 글이 가정하고 있는 '매체 이용-의사소통-사회 변화'의 상호 연관성 자체가 자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매체 이용-의사소통'의 연관성이 일종의 기술결정론인 '매체 결정론적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특정 매체의 이용에 따른 의사소통의 변화, 특히 의사소통의 범주, 즉 양, 질, 관계, 양식 등의 범주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밝힐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양식 등의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매체 이용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의사소통 행위의 변화를 이러한 범주들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한다. 그리고 사회 변화, 특히 민주화를 수반한 사회 변화의 주체와 동인 등을 설명하는 데 의사소통의 제 범주가 필수적으로 관련됨을 보여 주려 한다.

1) 매체 이용과 의사소통

모든 인간적 의사소통은 매체의 활용을 전제한다. 대중매체라는 기술적 장치와 제도를 매개하는 의사소통은 물론 대인적 의사소통의 경우에도 표정, 손짓, 몸짓, 그리고 음성을 전달하는 신체라는 매체가 필요하다. 고대의 제사장, 중세의 민네징어, 근세의 타운 크라이어 등의 신체적 매체와 소책자, 서적, 신문 등의 전달물 매체, 그리고 방송, 케이블, 인터넷 등의 장치적 매체는 모두 물리적 시공간에 존재하면서 메시지의 내용을 담아내는 물리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에 불가피한 전제 요건이 된다.

매체가 의사소통에 전제된다고 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체는 그 물질적 특성과 사회적 제도화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양식 등을 제한하지만 동시에 의사소통 행위자의 의도와 능력,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사회적 제도의 범위와 규정성, 의사소통 효과의 특성 등에 따라 선택되고, 가공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고대의 제사장이 전달하는 신탁은 흔히 제한된 정보량, 암시적 스타일, 일방적 드러냄, 전통적 의미의 활용 등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반면, 근세의 선전용 소책자나 팸플릿은 모국어로 쓰인 간결한 글쓰기, 그림을 동원한 노골적 폭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접근, 종교나 정치적 투쟁의 수행 등과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신탁에 동원된 신체적 매체와 선전에 동원된 소책자 매체가 이런 양식적 특성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매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매체를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과도한 책임전가는 흔히 매체의 물질적·표현적(따라서 때로 장식적이거나 과시적이 되는)·제도적 가시성에 의해 강화된다. 눈에 띄는 매체가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의 채택과 보급은 그에 따른 이용자 기반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행위 양식의 출현 조건이 될 뿐, 결정적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텔레비전의 출현과 같은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 매체조차도 사회적 요구와 목적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면서 당대 사회의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이용과 변용이 결정되는 사회 구성적 산물이라고 한다(Williams, 1974). 매체가 활용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의 요구에 따라 매체가 물리적으로 선택되고, 제도적으로 조정되고, 문화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의 이용 방식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인터넷의 매체적 특징을 원인으로 드는 경향이 있다. 즉 개방성, 쌍방향성, 익명성, 비동시성, 비통제성 등 매체적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매체 이용과 접근이 다른 매체에 대한 이용과 접근과 구별되는 바를 제시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사회적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인터넷 이용의 익명적 특성과 비동시성 등은 정치적 정보 교환과 상호작용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급되며(Hamasim, 1993; McGrath, 1991), 인터넷의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참여를 돕는 기술적 특성으로 간주된다(Rheingold, 1993).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의 매체-기술적 특징들은 그 자체가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은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가시적 통제와 규제의 영향력이 더욱 세련되게 작동하는 경향을 보이는지도 모른다(Lessig, 1998).

어떤 매체도 그 기술적 특성에 따라 저절로 해방적이거나 통제적으로

되지 않는다. 중앙집권적이고, 독점화되고, 접근성이 제한된 매체는 확실히 통제적 의사소통에 활용될 확률이 높은 반면, 분산적이고, 다중 통제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매체는 해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Sola Pool, 1983). 하지만 이런 매체의 분산성, 통제성, 접근성 자체가 주목되고, 계발되고, 통제되는 방식은 또한 별도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방식은 매체 기술이 어떤 사회적 의도를 실현하며, 어떤 의사소통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민혁명기의 서적의 광범위한 유통에 따라 독서 공중이 등장하고 계몽적 자유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출판 기술은 분명 하나의 해방적 기술로 기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출판 기술의 발전과 출판사의 증가를 통해 실제로 초래된 것은 가장 강력한 매체 통제의 방식인 검열제도의 성립이며, 출판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규제와 시장통제의 논리는 독서 공중이 증가하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더욱 세련된 형식으로 강화되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출판매체 기술의 발전이 시민혁명에 긍정적으로만 기여했다고 말하기 어렵다(Hesse, 1991; Keane, 1991).

결국 나는 우리 사회의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 변화를 단선적으로 또는 결정론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인터넷 매체가 민주주의의 도구가 된다는 주장이나 이동전화가 사회적 이동성을 강화함으로써 권위주의를 해체한다는 주장 등 매체 결정론적 설명 등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회 변화 과정에 동원되는 도구이자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은 그것의 물질적·표현적·제도적 조건인 매체의 활용을 전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매체 이용이 곧 사회 변화라거나 사회 변화의 주 원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반대로 사회 변화에 수반하는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가 특정 매체의 채택을 돕는 경향도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관계형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

에 따른 의사소통 행위의 변화를 탐색하되, 그것을 의사소통 행위와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개념인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양식 등 제 범주 개념을 사용해서 '매체 이용-의사소통'의 관계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의사소통-사회 변화'의 관계성도 탐구하려 한다.

2) 의사소통 범주들

나는 의사소통 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의 집합으로서 양, 질, 관계, 양식 등의 범주를 제시한다. 이런 범주들은 모든 개별적 의사소통 행위를 이해하고,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1) 양

의사소통 양은 정보의 양, 메시지의 밀도, 채널의 크기, 교환의 빈도, 의사소통의 효율성, 지속성 등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규모, 밀도, 강도, 범위 등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며 모든 의사소통에 대한 관찰의 기본 단위로 작용한다. 이는 동시에 의사소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원용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양의 개념이 없으면 의사소통 전 과정, 즉 정보원, 채널, 메시지, 효과 등에 대한 인식과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정보(information)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의 논리적으로 가능한 대안의 수로 정의되는데, 이는 어떤 사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메시지의 양이다. 이는 흔히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 개념의 기초가 되며, 이를 활용해서 메시지 구성, 수용자 변화,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 등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Krippendorff, 1986).

의사소통 양에 대한 관심은 흔히 정보처리 능력(capacity) 또는 의사소통 능력(competence)과 관련해서 논의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은 다른 개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다른

표 9-1. 의사소통의 범주와 개념

범주	개념	주요 논점	적용된 이론 사례
양	- 정보량		
	- 메시지 밀도	- 주체 의사소통 능력 또는 매체의 수용능력의 중요성	- 불확실성 감소 이론
	- 채널 규모	- 의사소통 양과 비용의 관계	- 매체 풍부성 이론
	- 범위	-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전환	- 사회적 실재감 이론
	- 교환 빈도		
	- 지속 시간		
질	- 효율성		
	- 타당성	- 의사소통 가치의 중요성	- 사회교환 이론
	- 공정성	- 메시지의 품질	- 공손전략 이론
	- 신뢰성	-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조건	- 설득의 두 경로
	- 예절(manner)	- 적절성	
관계	- 관계 종류 (일대일/일대다/다대다)	-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과 가치	
	- 상관성/인과성	- 개인과 집단의 관계	- 사회정체성 비개인화 모형
	- 친밀성	- 대안적 의사소통의 가능성	
	- 매력성(고매력/저매력)	- 대인적 관계와 대중매체를 통한 관계의 차이성	- 사회적 맥락단서 이론
	- 권력(지배/피지배)		
	- 동질성(동질적/이질적)		
양식	- 공유 양식	- 의사소통 맥락의 중요성	- 의사소통의 두 모형
	- 전달 양식	- 전략적 의사소통과 공유적 의사소통의 차이	- 공론장의 구조변동
	- 합의 양식	- 속의 민주주의의 의사소통 기초	- 공론장에 대한 수정주의적 모형들

개인은 다른 개인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표현력이 풍부한데, 이는 개인 간 정보처리 또는 의사소통의 능력 차이로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 밀도가 높거나 효율적인 연결망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관계유지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 간 의사소통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관찰에 근거해서 개인 간 정보생산, 교환, 소비의 차이를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집합적 수준에 적용시켜 집단 간 또는 사회 간 정보의 생산, 교환, 소비의 차이와 변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요컨대 의사소통 양 범주를 이용해

서 개인, 집단, 사회의 차이성과 변화에 대한 판단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질

의사소통 품질은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예절(manner)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의사소통의 질적 차원은 물론 이들 이외에 다른 개념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의 가치와 관련되어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등이 주로 논의되며, 관습의 준수나 타자에 대한 예절 등도 의사소통의 질적 차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타당성'은 구성요소 간의 무모순성이나 상호 지지성을 의미한다. 전제로부터 수미일관하게 도출된 결론이 타당하듯이, 목적과 일치하는 수단적 의사소통이나 자료적 근거를 갖춘 설득적 의사소통은 타당하다. 그런가 하면, 공정성은 기회나 능력에 따른 상호배제적 자원의 적절하고도 균형적인 배분과 관계된 것이며, 신뢰성은 정보원, 채널, 매체 등에 대한 반복적 의존가능성과 관련된다. 예절은 일종의 적절성(relevancy) 추구 행위이다. 여기에서 적절성이란 의사소통 상대에 대한 적응, 상황에 대한 적응, 상호작용 절차의 준수, 문화적 양식의 이해와 적용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절은 적절함이 평가되는 규범체계를 전제하며, 그 규범체계는 흔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사회, 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

공정성, 신뢰성, 예절 등의 의사소통 품질 개념들은 '이상적 가치'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가치들은 바람직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조건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즉 타당하거나, 공정하거나, 신뢰적인, 적절한 의사소통은 흔히 그렇지 않은 의사소통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의사소통 품질 개념들은 텍스트 구성, 매체 활용, 상호작용 행위, 의사소통 효과 등 다양한 대상에 적용되어 평가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공정성과 타당성 등과 같은 개념은 뉴스 텍스트의 구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전용되어 바람직한 언론의

실행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흔히 언론의 공정성과 타당성 등은 양적인 척도나 기준을 들어 논의되기도 하지만(따라서 '가' 신문이 '나' 신문보다 공정하다 등의 판단이 가능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포착된 현상을 넘어선 어떤 이상적인 가치의 적절한 실현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3) 관계

의사소통 관계는 매체를 통해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관계성을 규정한다.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관계와 같은 상관성도 하나의 관계적 개념이 되지만, 독립과 의존 또는 지배와 피지배 같은 관계의 질적인 수준을 포착하는 개념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소통 관계는 참여자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유지와 단절을 선택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다른 관계는 그러한 유지와 단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거나 아예 없다. 따라서 많은 귀속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지만, 가입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관계는 독립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동질적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이질적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질성의 여부도 의사소통 관계 범주에 속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관계 범주는 품질 범주와 결합해서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특별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참여자 간 담론 권력의 행사가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공정'하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지배 관계, 효율성, 비공정성의 결합은 해당 의사소통 관계에 대한 고유한 판단을 낳게 된다. 이 경우 그 판단이란 '관행과 업무 중심적 암호에 의존하는 일방향적 의사소통 행위'가 지배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기 쉽다. 예를 들어, 군대나 결사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그 관계적 속성에 따

라 그리고 의사소통 질의 특성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의사소통의 관계적 연관성이 독립적 특성을 보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의사소통이 주로 전개되는 관계에서는 '맥락 독립적'이고 '관계를 재편성'하는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 취미공동체의 활동 초기에는 흔히 공정하고, 예절바르며, 차이성에 민감하지 않은, 즉 관용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상호작용 행위가 지배적이다. 결국, 특정한 관계적 특성과 결합한 개인 간, 집단 간, 사회 간 의사소통의 품질이 특정한 경향을 보일 때, 이는 일종의 '양식적 특성'을 갖게 된다. 다음에 논의할 의사소통 양식은 바로 이러한 결합에 의한 '양식적 특성'을 범주화한 것이다.

(4) 양식

의사소통 양식은 일정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의 가치, 관행, 제도를 파악하는 범주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양식은 양, 질, 관계 범주를 포괄하는 개별적 의사소통 행위에서 찾기도 하는 그러한 의사소통 행위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나는 여기에서 특별히 1) '공유 양식', 2) '전달 양식', 3) '합의 양식' 등 세 가지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 세 의사소통 양식은 '다수준, 다영역 의사소통 영역'으로서의 공론장(multi-level, multiple spheres of communication network) 개념에서 도출된다(이준용, 2005). 나는 기존 '공론장(the public sphere)' 개념이 과도하게 이상화되어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현실화되어서 이념적으로 의사소통의 이상성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공론장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다수준, 다영역 의사소통 영역으로 개념화된 공론장은 개별 영역, 교호 영역, 공통 영역 등으로 구분된 세 영역을 포함하는바, 의사소통의 세 양식은 각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수행되는 의사소통 행위

표 9-2 의사소통 영역별 주요 행위와 규범

의사소통 양식	공유 양식	전달 양식	합의 양식
공론장 개별 영역	개별 영역	교호 영역	공통 영역
개인 수준	인정 투쟁, 인사 친교, 교육, 역할 확인	논쟁, 설득	협상, 속의, 투표
집합 수준	집단 확인, 유지, 집단 재생산	집단 간 경쟁 및 대결, 이해관계 추구	규칙의 제정과 준수
필요성	개별 요구의 인식, 집단 정체성 강화, 능력의 배양과 효능감 습득	개별 요구의 달성, 타자에 대한 정보전달, 태도변화, 행동 통제	개인 간 상충된 이해 조정, 합의 형성
의사소통 규범	진정성 표현, 공통성 확립, 전통의 준수	영향력의 확대, 효율성, 효과의 강조	공통으로 준수할 수 있는 규칙 제정, 공통 규범 확립

자료: 이준용(2005), 「공론장 개념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의 〈표 1〉을 수정해서 제시함.

집합에 의해 구성된다. 즉 개별 영역의 의사소통 행위의 지배적 양식은 공유 양식이며, 교호 영역은 전달 양식, 공통 영역은 합의 양식 등에 해당한다. 각 의사소통 양식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유 양식: 다수준, 다영역 공론장 모형의 '개별 영역'에서 주로 관찰되는 의사소통 행위에서 발견되는 양식이다. 이 양식에 고유한 의사소통 행위는 '사교적 대화', '개인사의 고백', '공통의 경험의 이야기 구성' 등이다. 친교적 대화, 집단의례, 학습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적인 동일성을 확인하고, 전통에 따라 역할 수행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는 개성과 취향에 근거한 의사소통 행위가 참여자들 간에 공유되고, 내밀한 사적 영역의 대화나 이야기가 참여자들에 의해 인정되는 의사소통 양식이기도 하다.
- 전달 양식: 공론장의 '교호 영역'에서 주로 수행되는 의사소통 양식으로서 선전, 설득, 논쟁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효능감을 확인한 개인이나 집단은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이해관계를 달

리한다는 인식하에,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 전달, 태도 변화, 행동 통제 등을 추구한다. 이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의사소통이며, 효과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행위이다. 주장을 통한 자신의 의견 전달, 논쟁을 통한 상대방의 설득, 강제력의 행사를 암시하는 위협에 이르기까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쟁과 대결을 운 영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주로 나타난다.

• 합의 양식: 이 양식에 속하는 주요한 의사소통 행위는 규칙의 제정을 위한 회의, 규칙 조정을 위한 회의 등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여기에서 합의란 '의사소통의 목표로서의 의견 일치를 현실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실적 합의'가 아닌 '현실적 갈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제적 이념(regulative ideal)'이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현실적 협상, 토론, 투표 등과 같은 참여자의 동의에 따른 '합의를 추구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포괄한다. 상충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참여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과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정되는 이념들, 즉 공개성, 공정성, 합리성 등의 이념들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사소통 양식이기도 하다. 흔히 공론장의 공통 영역에서는 개별 영역이나 교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설득이 아닌 교섭, 대결이 아닌 합의, 연대가 아닌 협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의사소통 행위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개별 영역이나 교호 영역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이 조정되어 각자에게 수용될 수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 재해석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개성, 공정성, 합리성 등의 이념이 작용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공적 이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우는 바로 이 양식에 속한 행위에만 제한된다.

나는 의사소통의 범주와 각 범주에 속한 개념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동질적이고 위계적인 의사소통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장식적 예절만을 갖춘 의사소통이 지배적일 경우, 집단의 동질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공유적 의사소통 양식은 발전하겠지만, 그에 따라 전달적이거나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이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듯 공유적 의사소통 양식만이 주로 발전한 사회에 속한 개인들이 집단 간 갈등을 경험할 경우, 그 갈등을 공정하고 비폭력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회는 공정성, 협동성, 예절 등의 가치를 판단의 근거로 이용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사소통 양식이 지배적인 사회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통제는 가능하겠지만 공동체적 덕성이 발휘되는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런 사회 역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소통 양식 범주를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사회란 각 개별 사회영역들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이 적절하게 그리고 고르게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준용, 2005). 공론장의 개별 영역에서는 공유 양식이 발전되어 정체성과 전통의 확립과 공동체적 규범이 확립되고, 교호 영역에서는 개별 요구의 관철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설득적 의사소통 행위가 지배적인 전달 양식이 적절하게 발전된다. 동시에 공통 영역에서는 공통의 합의를 위한 규범을 확인하고 규칙을 실천하는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이 지배적으로 발전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의사소통의 공유 양식이 개별 영역은 물론, 교호 영역과 합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침투한 사회는 특정 영역에 고유한 양식이 다른 영역에까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가 되고, 이 경우 영역과 양식적 특성의 대립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달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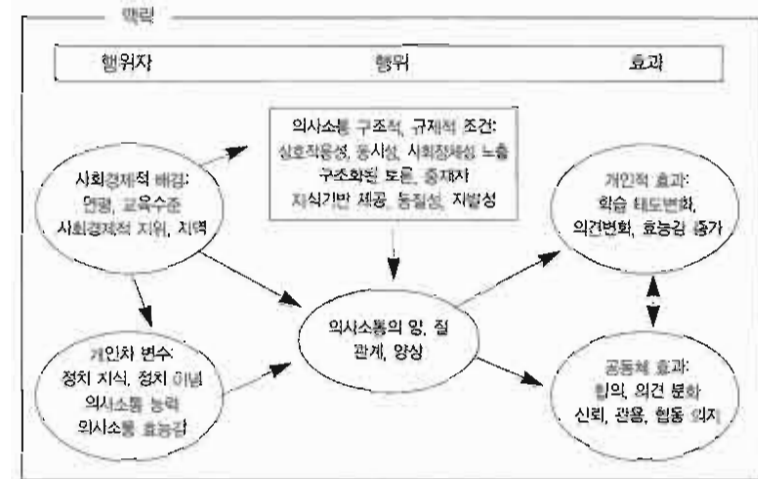
이 교호 영역을 넘어서 개별 영역과 합의 영역에 만연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영역과 양식의 대립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사회의 발전이란 사회의 각 영역에 적절하게 기능하는 의사소통 양식이 고유하게 발전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이 영역별로 적절하게 결합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의사소통과 사회 변화: 민주화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은 사회 구성의 기초이며, 사회 변화를 이루는 과정이자 수단이다. 의사소통 양식의 범주를 바람직한 사회를 평가하는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필요한 변용을 가해서 그 범주를 사회 변화의 한 종류인 민주화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착안이다. 민주화의 주체인 공중의 형성, 민주적 의사소통 규범의 확립, 민주적 토론 문화의 정착과 참여의 확대 등의 문제를 의사소통 주체, 방법, 과정, 효과 등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찰과 평가가 있다(송호근, 1997; 손호철, 2003; 임혁백, 2000; 최장집, 2005). 많은 평가자들의 개별적인 논의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요지를 종합해 보면,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지금까지 이룬 것만큼이나 향후 이루어야 할 여지가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국사회 민주화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먼저 한국사회가 제도적·형식적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천과 실질적 시민권과 기회평등의 보장을 이루는 데는 부족하며, 한국 각 사회의 이해관계와 요구의 충돌이 극심한 사회정치적 갈등으로 전환하지만 그 갈등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관찰에 근거한다.

나는 실질적 민주화의 요건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1) 의사소통 주체의



자료: 이준웅(2003), 『숙의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실험』

그림 9-2 숙의적 의사소통 과정/효과 모형

형성, 즉 '능력 있고 덕성 있는 공중의 형성', 2) 의사소통 과정의 정상화, 즉 '사회정치적 갈등의 숙의를 통한 해결', 3) 긍정적 의사소통 효과의 산출, 즉 '시민적 학습과 정치적 참여의 증가'와 '신뢰와 관용의 축적'으로 간접하게 정식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 효과의 창출, 즉 시민적 학습, 정치적 참여, 신뢰와 관용의 증가 등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사소통 과정의 구성요소인 '행위자', '구조적 조건', '규제적 조건', '의사소통의 양과 질', '개인적 및 집합적 효과' 등의 변수들을 이용해서 재구성하는 일종의 설명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 모형은 민주화, 특히 그중에서도 능력 있고 덕성 있는 시민의 의사소통적 실천을 매개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규범의 채택이라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의 진행을 설명하는 셈이 된다(이준웅, 2003).

〈그림 9-2〉에 제시된 의사소통 모형은 갈등하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합리적 토론과 논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

현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토론과 논변을 통한 민주적 규칙과 법률의 채택과 집행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행위의 동원인데, 숙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효과 모형'으로 제시하는 근본 동기는 이런 모형에 근거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의사소통 계획(the communication project for deliberative democracy)'을 제안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그림 9-2>에 제시된 숙의적 의사소통 과정/효과 모형은 숙의의 사회적 맥락조건과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적 지식과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한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구성변수(constructs)를 포함하고, 동시에 숙의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개인적 수준의 효과와 공동체 수준의 효과로 구분해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 모형을 이용해 맥락에 따라 제한되는 의사소통 관계와 방식의 차이와 숙의 과정에 동원되는 의사소통 양과 질의 차이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숙의적 의사소통의 개인적·집단적 효과를 탐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모형을 이용해서 의사소통 조건, 혹은 이른바 '의사소통의 구조적·규제적 조건'을 실험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서로 다른 숙의 효과에 대해 주목할 수도 있다. 인터넷 토론에서 '익명성'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중재자가 토론에 개입해서 욕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든지 하는 통제에 따라 어떤 숙의 효과가 산출되는지 검토할 수 있다(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결국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 요소를 통제함으로써 개인적 효과, 즉 학습, 의견변화, 효능감 증가와 같은 효과나 집합적 효과, 즉 합의 또는 의견 분화, 신뢰, 관용, 시민적 참여, 협동여지의 증가 등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탐색한다. 또한 이 모형을 이용해서 과연 어떤 조건에서 가장 깊이 있고, 지속적이며, 품질 높은 숙의가 발생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숙의의 결과 어떤 개인적 수준 또는 공동체적인 수준에서의 효과가 산출되는지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숙의 민주주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 가운데, <그림 9-2>에 제시된

경로들, 특히 토론행위에서 효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구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토론 여부가 토론에 참여한 개인의 정치적 지식의 습득과 세련화(Gastil & Dillard, 1999), 숙의적 의사소통에 따른 학습과 의견 변화(Fishkin, 1991, 1995), 의견의 품질의 향상(Cappella, Price, & Nir, 2002; Kim, Wyatt, & Katz, 1999), 정치적 참여의 증가(McLeod, Scheufele, & Moy, 1999), 사회적 신뢰의 확대(Price & Cappella, 200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이 모형을 이용해서, 토론의 조건 또는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양식 등을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토론의 구조나 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후속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중개변수로 보아 전체 과정을 탐색할 수도 있다(김은미·이준웅, 2006;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이준웅·김은미, 2006). 숙의 민주주의의 효과는 이러한 중개변수를 매개로 해서 토론의 구조와 양식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을 산출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 모형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 강화 프로젝트'를 고안해 볼 수 있다.

- 의사소통 조건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양과 질이 토론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숙의의 의사소통 조건, 특히 구조적·규제적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더 많은 의사소통 그리고 타당하고 예의바른 의사소통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민주적 토론의 효능감 증가'와 같은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이준웅·김은미, 2006). 이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담론적 참여의 기반이 되는 정치토론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

- 의사소통 관계와 품질이 신뢰에 미치는 효과: 위계적이며 동질적인 귀속집단 활동을 하는 개인들에 비해 탈위계적이며 이질적인 집단에 가입한 개인들 간에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의사소통, 즉 품질 높은 의사소통이 지배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품질 높은 의사소통 경험이 축적되면 '모르는 사람과 협동을 무

롭쓰는 경향, 즉 일반적 신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이준용·문태준·김은미, 2006). 민주주의적 문화의 발전에 집단 내, 집단 간 신뢰가 도움이 된다면, 이는 신뢰의 확대를 통해서 개인의 이해관계 추구하고 공통의 이해 달성을 조화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협동을 진작할 수 있다.

• 의사소통 품질이 의사소통 주체의 능력 증대 효과: 품질 높은 조건에서 의사소통 훈련을 받는 경우, 예컨대 전문가로부터 공공화법(public speaking)과 토론 교육을 받는 경우 의사소통 주체의 의사소통 능력과 효능감 등이 증가하며, 타인과 토론할 때 지켜야 할 의사소통 규범에 대한 준수 의지도 고양된다(이준용·이상철·이귀혜·유정아·장윤재·김현석, 2006). 이는 공공화법과 토론 등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공정한 상호작용하기, 타당한 장 제시하기, 타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적절성 평가 등 고품질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절하게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의사소통 효능감 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의사소통을 통한 속의 민주주의 강화 프로젝트’는 결국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단순한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을 통한 형식적 민주화가 아닌 실질적 민주화를 통한 시민적 정치문화의 확립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아님 1) 의사소통 주체의 시민적 능력의 함양, 즉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고 시민적 덕성이 있는 공중의 형성, 2) 의사소통 과정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즉 공정하고, 타당하고, 품위 있는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정치적 갈등의 숙의적 해결, 3) 의사소통 효과의 산출, 즉 시민적 학습과 참여, 그리고 신뢰와 관용의 증가이다. 이런 종류의 실질적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의사소통 주체들의 의사소통의 양, 질, 관계 등에 관련된 사회적 실천을 전면 개선하는 것과 관련되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제 영역에 적절하고도 조화로운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을 발전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통한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동원되는 의사소통 양식을 보면 공유 및 전달 양식의 지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일단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귀속집단들과 가입집단 활동을 통해서 집단 내 친교, 교육, 상호부조를 하는 정체성과 요구 확인을 강화하는 공유적 의사소통 양식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이렇듯 공유적 의사소통을 통해 강화된 집단 정체성과 요구를 갖는 개인들 또는 집단들 간에 의견과 목적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의견과 태도를 설득, 선전, 투쟁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전달 양식, 특히 비타협적 선전 양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한편으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과 고용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사생결단에 가까운 투쟁으로 전화하는 노사분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정치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은 확립되지 않고 있다. 즉 상호작용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념,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실천적 의사소통, 규범의 확립, 그리고 이에 전제되는 능력 있고 덕성 있는 의사소통 주체의 존재를 가정하는 의사소통 양식은 공유 양식과 전달 양식에 비해 과소하게 발전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달성을 합의 양식의 지배적 발전을 통한 상호지향적이며 품질 높은 의사소통 양의 증가로 정식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능력 있고 덕성 있는 공중의 형성, 갈등의 숙의적 해결, 그리고 신뢰와 관용의 증가 등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는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한국사회 민주화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는가?

3. 한국사회의 변화의 핵심: 관계적 매체 이용의 폭증

1997년 이후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이 급증했으며, 이제는 이 두 매체의 생활세계 지배력은 적어도 양적으로 보자면 포화에 다다른 듯하다. 모든 가족관계, 친구관계, 업무관계, 사회운동, 정치적 참여 등 모든 영역과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동전화와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이 절에서는 '매체 이용-의사소통-사회 변화'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 민주화의 문제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동전화와 인터넷 이용 증가에 수반해서 변화했다고 보이는 세 현상에 대한 관찰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1) 가족 간 의사소통 양과 질의 변화에 따른 친밀성 개념의 변화, 그리고 그에 의한 가족의 '관계적 속성'의 발전, 2) 가입집단 활동에 따른 새로운 의사소통 관계의 경험, 3) 인터넷 공간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효능감을 신장시킨 인터넷 담론 공중의 등장 등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1) 사적 영역의 관계적 친밀성의 변화

지난 10년간 이동전화의 보급은 생활 세계의 사적 영역에서 의사소통 폭발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 등 기존의 사회관계에 수행된 의사소통의 양이 폭증한 것은 물론 의사소통 행위의 대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전화 이용의 증가에 따라 특별히 언급해야 할 점은, 이동전화를 이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시공간 제약성이 점차로 감소하면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기능적 구분이 점차로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 중 사적 통신의 일상화와 재택근무의 증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에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접근 가능성과 그에 대한 문화적 허용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공간 제약성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동전화는 업무처리와 같은 도구적 이용에서도 그 중요성이 확인되지만, 주로 가족관계와 친분관계 등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는 무엇보다도 사적 통신의 매체로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의 사적인 통신과 업무 처리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황주성, 2005). 정보검색, 거래, 그리고 오락적 이용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계 유지와 업무 처리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의 이용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회기(session)'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회기'란 물리적 시공간에서 한 번의 시작과 끝으로 구획되는 의사소통의 양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이는 의사소통 흐름의 단위로서 전화 통화, 문자 수신과 답장, 대인적 만남,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 영화 관람, 축제 참여 등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매체의 이용 특성을 회기 개념을 적용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은 '클릭' 한 번에 의해 쉽게 질적으로 다른 회기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용에 있어서도 정보검색, 게임, 커뮤니티 활동, 쇼핑, 교육 등 주제별로 회기의 유형이 완전히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인터넷 경험의 특유의 몰입감(이는 아마 인터넷 경험의 질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흐름의 리듬감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은 이러한 인터넷 특유의 회기 전환에서 유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이동전화 이용의 '시공간 재편 가능성'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전화를 이용한 의사소통 회기의 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개인은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관계적 매체를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초월해서,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넘나들면서 의사소통 회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간 이동전화 이용의 증가는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성을 확인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동전화의

도입으로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시간적으로 짧지만 빈번한 의사소통 회기로 구성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 확인되는 '친밀함'의 내용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가정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친밀함의 내용이었으며, 그것은 상대적으로 길면서 빈도는 적은 의사소통 회기로 구성된 가족 간 의사소통 행위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이제 가족 간 의사소통에는 '시공간을 떠나 자주 일상적 대화를 통해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동전화 이용 증가를 수반한 가족 간 의사소통의 양적 변화는 가족 간 관계의 친밀성의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가족은 함께 자고, 먹고, 씻고, 다시 자는 의례적 관행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유대성을 확인하는 단위였다면, 이제는 서로 수시로 안부를 묻고, 답하고,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답변을 구하는 친밀함을 강화하는 단위가 되었다. 이제 가족관계는 공동경험 중에서 특히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유지되고, 관리되는 '친밀한 의사소통 경험'에 의해 구체성을 획득한다. 지난 10년간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 간의 사진 찍기,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의 반복적 응시, 가족 외식 및 여행의 증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족 간 친밀한 의사소통 회기의 양적 증가 등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유지되고, 관리되는 관계로서의 가족의 특성을 보여 준다.

'친밀한 가족'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가족에 대한 담론도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관계적 속성의 재발견은 <아침마당>,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성시대> 등 가족 간 내밀한 경험에 대한 폭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매체 프로그램에서 대중적 담론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원래 가족이란 혈연적 기초에 의한 사적 영역의 재생산과 축적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초 단위로 기능하며, 전통적 가족담론은 이런 기능을 반영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의 정체성, 공통성, 유대성, 신성성 등이 더 이상 단순한 혈연에 기초한 것이 아닌, 의사소통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가족 구성원의 공유 양식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안부확인, 행위증명, 감정표출, 의견표명, 요구확인 등 공유적 양식의 의사소통이 가족 경험의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과거의 소위 '말이 필요 없는 관계', '상호 의존적 관계', '재산과 운명을 공유하는 관계'인 가족관계가 이제는 '말로써 유지되는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요구를 공유하는 관계'인 가족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짧지만 빈번하고,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친밀함의 표현을 통해 강화되는 관계는 젊은이들의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에게 '친분' 또는 '우정'은 친구 간 미니 홈페이지 방문과 댓글의 횟수로 가늠할 수 있는 양적인 개념으로 전화하고, 이런 공유적 의사소통의 양적 증가를 통해 상호 확인되지 않은 친분 또는 우정이란 그야말로 '썰렁한' 관계가 된다. 접근성이 기술적으로 보장되고 접근 비용이 최소한에 불과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친분관계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마음에 남아 있는 친구'란 점차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상대가 된다. 또한 방문과 댓글이 없는 썰렁한 미니 홈페이지는 소통하는 주체의 '능력 없음' 또는 '관심 없음'을 드러낸다. 표출되지 않은 친밀함은 무능력이거나 무관심의 증거일 뿐이다.

의사소통 회기의 양과 질로 측정될 수 있는 친밀성 관리 행위는 의사소통 행위자로서의 관계적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과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친밀성의 관리는 내가 구성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회적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수반하는바, 이는 다시 이렇게 구성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갖춘 구성적 자아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즉 가족과 친분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의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의사소통 행위의 패턴 변화를 통해서 개인은 이런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체로서 강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밀성의 폭발에 따라, 말을 하지 않지만 행사되는 아버지의 권력이나 또는 만나지 않아도 연결된 듯한 끈끈한 우정이나 유대감이 더 이상 유

지되기 어렵게 된다. 말 없는 권위를 행사하는 아버지나 만남 없는 유대감을 느끼는 동료란 빈껍데기가 되고 만다. 반대로 관계를 맺는 주체의 의사소통 의도와 능력이 매순간 시도되고, 보여지고, 공유되는 순간마다, 그 의사소통 행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표현적이며 수용적인 자아가 강화된다.

결국 나는 관계적 매체의 이용 증가에 따라 친밀한 의사소통이 관계형성과 유지의 핵심적인 장치로 강화되고, 그 결과 이러한 의사소통 행위는 사적 영역 최소단위 구성원의 '소통하는 주체로서의 경험' 또는 '표현적 자아'의 경험을 강화시켰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적 영역의 가장 내밀한 가족 영역에서부터 의사소통을 통해 존재, 행위, 감정, 요구를 표출하는 '표현적 자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적 자아의 성장은 또 다른 관계적 매체인 인터넷 이용의 증가에 따라 등장한 '비판적 담론 공중'이 존재한다는 현실과 공명한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친밀한 사적 공간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과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 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인식도 역시 소통하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강화한다.

2) 가입집단 활동의 새로운 경험

인터넷 매체의 이용은 생활 세계의 거의 모든 영역의 의사소통 양, 질, 관계,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가입집단' 경험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인터넷 포털의 카페, 커뮤니티, 동호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취미, 오락, 종교, 학습집단 경험이나, 전문 사이트의 가입자 전용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보 공유 및 친목의 경험은 과거 오프라인 사회집단 경험과는 다른 내용을 제공한다.

원래 우리나라 가입집단 활동은 친목계, 종교집단, 동호회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활동은 동창회와 향우회 등 한국사회에 강력하게 형성된 '연고적 귀속집단'에 고유하게 편재하는 사회자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귀속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활동을 통해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하면서 강화된다. 즉 과거의 가입집단 활동이란 신용거래, 상호부조, 귀속감 경험 등 원래 귀속집단에서 고유하게 제공하는 집단 경험을 대안적 방법으로 얻기 위한 대체제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가입집단의 경험에서 확인되는 의사소통 행위도 대체로 귀속집단의 의사소통의 그것과 유사했다. 동창회나 향우회와 같은 '동질적이고 위계적인 집단'에서의 권력적이고, 장식적이고, 고맥락적(high-contextual) 의사소통이 발전하듯이, 가입집단에서도 과도하게 장식적 예절에 민감하고,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며, 맥락의존적 성격의 의사소통을 지향했던 것이다. 가입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서로 안면이 없었던 생면부지의 가입자들을 빠르게 '형님-아우 관계' 또는 '언니-동생 관계'로 재편성함으로써 '동질적이고 위계적인 집단경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입집단 참여의 주요 동기였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가입집단의 경험은 과거의 '귀속집단을 대체하는 가입집단 경험'과 사뭇 다르다. 가입과 탈퇴가 쉽지 않은 과거의 가입집단 관리와는 달리 인터넷 가입집단은 '가입과 탈퇴가 한 클릭으로 가능하며', 이러한 관계에 대한 통제가능성은 인터넷 가입집단의 본질적 경험의 일부가 된다. 즉 필요하면 가입하고, 맘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인 것이다. 과거에는 거래비용 감소를 추구하는 것이 집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지하는 주요한 동기였다면, 이제는 그런 기본 동기에 새로운 집단 참여에 따른 전환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새로운 고려가 더해졌다. 인터넷 가입집단을 포함한 가입집단이 귀속집단이 제공하는 귀속감, 연대감, 안정감의 경험과 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때로 귀속집단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만한 조건을 갖추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이런 가입집단들이 전통적인 귀속집단들을 기능적

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정작 중요한 점은 가입집단의 활동이 '새로운 집단 내 의사소통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인터넷 가입집단의 활성화는 품질 높은 의사소통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이준웅·문태준·김은미, 2006). 즉 공정하고, 타당하며, 배려하는 예절에 민감한 의사소통이 새로운 가입집단에서 지배적인 의사소통의 규범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동호회나 취미집단의 의사소통을 관찰해 보면, 흔히 연령과 관계없이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고, 저맥락적 지칭과 구체적 지칭을 사용하며, 발언 기회의 공평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암묵적으로 보장되고, 초점이 되는 관심과 주제에 집중하는 의사소통이 지배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의사소통 품질은 인터넷 동호회나 취미집단의 오프라인 모임으로도 전이되어 유지되는 경향이 적지 않게 보인다. 한 온라인 사진 동호회의 경험에 근거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오프라인 모임에서 대학교수, 사회초년생, 고등학생 회원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암시된 관행이 없이 모든 규칙을 그때그때 확립해야 하며, 주제에 집중하는 대화 양식을 보인다.

나는 전통적 귀속집단 활동의 약화와 새로운 가입집단의 경험에 따라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집단 내 의사소통의 품질과 관계의 변화를 보인다고 관찰한다. 학교 선후배, 직장 선후임,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동향 인물 간의 언어 사용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런 관계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면 재수 없다고 따돌림당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관계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말을 놓으면 오히려 무례하다고 평가받는 변화가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집단 내 의사소통에 수용되는 예절 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의사소통 예절의 변화가 다른 아닌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관계형 매체의 이용증가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없다. 또한 이동전화와 인터넷 매체 이용의 증가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사회적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집단 구성의 원리 및 의사소통의 규범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이런 변화가 다른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이동성(mobility)의 증가, 위계적 질서의 불안정성 증가, 집단 내 관계 유지의 불확실성 증가 등과 관련된 일종의 사회관계의 내용 변화와 관련된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나는 이동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관계지향형 매체의 사용 증가에 따라 이런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사회의 유동성 증가와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과거의 의사소통 행위가 변화된 의사소통 품질, 관계, 양식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읽고 쓰는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

우리 사회에 '매체 이용-의사소통-사회 변화' 모형을 적용시키면, 인터넷 매체를 담론적 실천의 장으로 삼는 새로운 담론 공중(discursive publics)의 등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읽기'와 '쓰기'와 같은 담론적 실천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효능감을 스스로 고양시킨 담론 공중이 등장했으며, 이들이 한국 주류적 공적 담론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은 다른 아닌 '정치적 공정성 요구'에 있다는 관찰이 제시된 바 있다(이준웅, 2005). 인터넷 담론 공중, 혹은 '비판적 담론 공중'이라 소개된 이들은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신문 사이트, 블로그 등에 설치된 게시판, 토론광장, 댓글 공간 등에 제시된 정치와 공공 사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담론 공중은 토론문을 쓰고, 댓글을 남기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쓰기'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들은 '읽는 공중'으로 존재한다(김은미·이준웅, 2006). 관

계적 매체인 이동전화의 이용 증가에 따라 '표현적 주체'가 형성되듯이, 관계적 매체인 인터넷의 이용 증가에 따른 '집합적 화자와 청자(혹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쓰는 자와 읽는 자)'가 형성된 것이다. 누군가 인터넷 토론방에서 이야기를 개시하는 경우, 그 이야기를 읽어 줄 만한 관심을 가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독자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런 '공감적 청중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다시 쓰는 행위를 강화한다. 다시 말해서, 표현적 자아의 강화는 공감적 청중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며, 공감적 청중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표현적 자아를 강화한다.

인터넷 담론 공중이 특히 인터넷 매체에 공급되는 뉴스, 토론글, 댓글 등을 읽으면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접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치적 입장, 다양한 수준의 글쓰기, 다양한 표현 방식을 보이는 담론을 접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길러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쓰기를 통해 그런 담론들에 대해 반응한다. 또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적 공적 담론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조롱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비판적 안목을 드러낸다. 나는 바로 이러한 읽기와 쓰기의 경험, 즉 인터넷 매체의 이용을 통해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갖춘 공적 담론을 접하게 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적 시각을 갖춘 개인들이 스스로를 '여론의 반영자' 또는 '여론 형성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이 이들을 '공중'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공중의 등장 과정에는 인터넷 매체의 이용자 증가와 이용량의 증가에 따른 '공적 담론에 대한 비판과 공정성 요구'와 같은 고품질 담론 행위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가시적으로 등장한 '인터넷을 통해서 읽고 쓰는 능력과 효능감을 갖춘 담론 공중'의 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을 확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매체의 보급

에 따른 담론 주체의 성립과, 둘째, 담론 주체의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의 확립을 통한 사회변화라는 두 과정이 확립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정, 즉 새로운 매체의 이용에 따른 담론 주체의 확립은 1) 근대 서구 사회의 정치평론 매체의 등장과 시민적 공론장의 성립, 2) 미국 대중지의 성장과 소비적 중산층의 지배 확립, 3) 아랍 위성매체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아랍 민족주의적 담론 주체의 등장' 등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이다.

서구의 예를 들자면, 신문, 뉴스 책, 정치 팸플릿 등 부르주아 정치 매체의 등장에 따라 공적 사안에 대한 대화가 증가하면서 여론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영향력의 담지자인 공중이 가시화되었다는 주장을 가브리엘 타드(Tarde, 1922/1969)에 대한 캐츠의 해석에서 찾아 볼 수 있다(Katz, 1987; Kim, Wyatt, & Katz, 1999). 공적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매체의 등장, 그에 대한 공중의 대화 증가에 따른 개인적 의견의 정교화, 그리고 그에 따른 집합적 수준의 여론 형성 및 개인적 수준의 참여의지 증가 등에 주목해서, 캐츠는 적어도 서구에서는 매체 이용이 공적 대화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비록 '공중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1 시게노부(Shigenobu, 2006)는 1990년대 말 위성방송을 이용한 알 자지라(Al Jazeera), 알 아라비아(Al Arabiya), 알 후라(Al Hurra) 등의 등장에 따른 아랍 민족주의 의식의 활성화에 주목한 바 있다. 그녀는 아랍어 사용 22개국에 아랍어 사용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이 수신되기 시작하면서, 서방 중심의 뉴스가 아닌 아랍의 시각에서 본 아랍인의 문제에 대한 뉴스를 시청한 아랍인들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아랍인들 간에 새로운 공통의 '우리-아랍인' 개념이 등장했다고 해석했다. 아랍인들은 1차 걸프전을 겪으면서 BBC, CNN, VOA, AP, Reuter 등 서방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감을 느꼈으며, 동시에 이라크의 선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랍어 위성방송 채널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BBC Arabic News Channel이 실패한 1996년경 등장한 알 자지라는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 전쟁, 레바논 사태 등 중요한 아랍 관련 사태에 대해 서방의 시각이 아닌 아랍 공통의 시각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1) 아랍 공통의 문제에 대한 여론의 융합, 2) 아랍 국가별 방언의 극복, 3) 특히 9·11 이후 서방 대 아랍의 구도 형성에 대응, 4) 팔고 방송을 통한 공통의 상품시장 창출, 5) 성적·종교적·지역적 허부에 대한 이해와 의견 형성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기보다는 공중을 구성하는 개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형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매체 이용에 따른 담론 공중의 등장'이란 설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해석으로 다름 아닌 가브리엘 타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가브리엘 타드(Tarde, 1922/1969)에 의하면, 신문이 역사적으로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전달 매체로 등장했을 때, 신문을 읽는 독자들의 개별적인 행위에 포함된 이른바 '공적 정신의 결합(the unification of public mind)' 과정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공적 정신의 결합 과정에 의해 개인의 의견이 지역적 의견으로 전화하고, 다시 이것이 여론으로 전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결국 타드는 신문이 단순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공통의 사안에 대한 토론의 주제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개인의 새로운 결합, 즉 공적 의견 형성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확실히 '공중의 등장'에 대한 설명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버마스(Habermas, 1962/1989)의 근대적 시민의 '공론장' 형성에 대한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개성 또는 공론장의 등장, 즉 공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참여하는 개인들의 공적 행위의 등장은 다름 아닌 신문, 팸플릿, 소설 등의 출판물을 읽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내용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부르주아 시민의 등장을 의미한다. 근대적 시민의 정치적 공론장의 형성은 문예적 공론장에서 습득된 '읽기'의 경험이 새로운 언론 매체로 기능했던 정치적 출판물을 함께 읽고 논의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른바 '독서 공중(the reading public)'의 등장과 문예물을 포함한 다양한 인쇄물들, 특히 신문과 팸플릿에 대한 독서와 토론의 경험이 근대적 시민의 정치적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킨(Keane, 1991)은 근대적인 '독서 공중'의 등장에 대해 논의하면서, 근대 이전의 읽기 행위가 '제한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는' 것에 가까웠다면, 근대적인 읽기는 '많은 수의 텍스

트를 광범위하게 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근대적 읽기를 경험한 대중들은 공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토론 공중으로 전화하며, 이러한 공중의 행위가 곧 정치적 공론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은 논의에 필요한 변용을 가해서 한국사회에 인터넷 매체를 정치적 읽기와 쓰기의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을 중요한 담론 주체로 구성한 이른바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에 적용시킬 수는 없겠는지 고민한다. 특히 한국사회 인터넷 담론 공중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개인들, 하지만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읽기와 쓰기의 효능감을 얻은 개인들,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 강력하게 공정성 요구를 제시하는 개인들로서 구성되는바, 이들이야말로 매체 이용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의사소통 주체는 아니겠는지 질문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들은 무엇보다도 '읽는 공중'이며, 또한 때로 '쓰는 공중'이 되기도 한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때로 주류 언론 및 공적 담론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담은 공정성 비판을 전개한다는 데 있다. 공적 사안에 대한 글들을 읽으며 주류 언론과 공적 담론이 제시하는 정치적 해석에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그들의 정치적 주장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때로 대안적인 정치적 주장을 제시하는 이들을 '담론적 주체'로 보는 것이 무리일까.

한국사회 인터넷 담론 공중은 최근 몇 년간 몇 차례의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을 겪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2004년 대통령탄핵 사태와 총선, 그리고 2005년 황우석 교수 사태 등과 같은 중대한 사회정치적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이들은 읽기와 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한국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5년 황우석 사태 당시에 가시성이 높아진 인터넷 담론 공중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신세대도 아니고 구세대도 아

닌, 또한 교육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없고 낮다고 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어떠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경계로도 쉽게 경계를 정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자들로 보인다(김은미·이준웅, 2004). 이들은 토론방, 게시판, 카페 등을 근거지로 '읽기와 쓰기'라는 담론적 실천에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언론매체가 제시한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보와 해석에 대해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황우석 사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고, 각 등장인물의 동기를 추론하며, 황우석 사태의 배후에 진행되는 메타 플롯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연한 담론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인터넷 담론 공중의 등장은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여론 형성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한국사회의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적 토론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제 정치과정 및 사회적 여론 형성과정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 언론 및 공적 담론에 대해 비판적이며, 2) 담론적 실천을 전개하며, 3) 단일한 정치적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터넷 담론 공중들은 '비판적(critical)'이다. 이들은 주류 정치 문화에 대해 저항적이며, 특히 일부 주류 언론에 대해 비판적이다.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 등은 물론 포털 언론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하며, 기존 정치인을 포함한 전문가, 교수, 논객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도전하며 대안적 해석을 시도하곤 한다. 이들은 기존의 주류 언론이 자신의 이해관계 혹은 이념적 정향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담론을 구성할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거나 배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논변보다는 분노와 절망을 담은 감성적인 주장을 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부정적으로 계기화되어 있고 부정적인 비판을 주로 전개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일 뿐, '반성적

(reflexive)' 이거나 '비판적-합리적(critical-rational)' 이거나 '합리적(rational)' 이라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둘째, 이들은 '담론적(discursive)' 실천을 매개로 성장했다. 즉 이들은 행위적 참여를 하거나(participatory) 아니면 결사체 구성적(associational)이지는 않지만, 담론 행위를 통해 정치적 상호작용 능력과 토론 효능감(political competence and discussion efficacy)을 배양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강화된 공중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게시판, 토론방, 댓글 공간 등에서 활약하는데, 주로 읽는다. 사실 이들이 '읽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독서 공중, 또는 관심 공중으로 구성한 측면이 '쓰기'를 통해서 다른 독서 공중 또는 관심 공중에 영향을 미친 측면보다 더욱 중요하다(김은미·이준웅, 2006). 이들은 댓글 쓰기와 패러디 등 기존의 공적 담론에 기생하는 측면을 주로 보이지만, 인터넷 시민 저널리즘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담론 창출에 적극 기여하기도 한다.²

셋째, 이들을 집합적 '공중(the public)'이 아니라 복수의 '공중들(publics)'로 이해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이들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공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근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장에 참여했던 시민계급적 특성을 지니는 공중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 서로 확인하는 공통의 전통과 규범, 서로를 묶어 주는 어떤 이념 등과 같은 동

2 담론적 참여는 인터넷 포털, 인터넷 언론, 개별 사이트, 블로그 등의 게시물 올리기, 댓글 달기, 동영상 올리기 그리고 이러한 '쓰기'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읽기'를 포함한다. 이 중 이른바 '댓글 달기'는 '쓰기' 행위 가운데 가장 즉흥적이며, 감성적이며, 단 말마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분명 '댓글 달기'를 하는 사람은 비판적 담론 공중을 포함한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를 게시하는 자', '특정 정치 세력을 부조건 옹호하는 임무를 띤 자', '그라군 및 그 외 유사 종족들'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인터넷 담론적 참여 행위가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며, 인터넷 담론 공중도 다양한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텍스트도 다양한 장르, 품질, 기능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 면만 보고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능력과 효능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본다.

질적 배경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졌으며, 특별히 다양한 정치적 가치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개인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사회정치적 현실의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너무 크게 보인다. 대통령탄핵이나 황후석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들은 기민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항적 '여론'을 형성했으며,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와 같은 행동적 참여 양식을 조직해 냈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공적 사건이 제기될 때 관심을 보이며,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 행동을 조직하는 사람들을 개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을 무질서하고 부정행적인 '군중'이라고 보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들은 포털 뉴스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서도 물론 기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공적 담론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차분히 읽는 사람들이다. 선전과 선동에 동원되는 군중이 아니라 스스로의 검토와 선택에 의해 공적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치적 실천의 주요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인터넷 담론 공중들의 특성은 인터넷 정치문화의 특징과 연관된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적 실천행위는 주요 사건이 등장하면 양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했다가 보통 때는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되게 수행되는 양식을 보인다. 이들의 담론적 참여는 '읽기'와 '쓰기' 간 차이를 보이며, 행동적 참여가 촉발되는 방식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담론 행위는 대체로 합리적 주장의 교환을 통한 합의 형성 과정을 이루기보다는, 격렬한 의견대립과 갈등의 장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김은미·김현주, 2004; 김종길, 2005; 윤영철, 2000).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회적 갈등의 담지자 또는 반영자이지 해결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갈등적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양상을 보면, 일련의 부정적인 특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대화 양식은 독단적이고 파괴적이며, 일방적이고 분열적

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규범적이며 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비판받는데(박승관, 2005), 인터넷 담론 공중의 의사소통 행위를 보면 분명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

결국 인터넷을 매개로 정치적 읽기와 쓰기의 능력을 단련하고 이의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한 비판적 담론 공중들이 어떻게 갈등적 담론의 재생산을 넘어서 '상호성', '관용', '절차성', '합리성' 등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는 공중으로 진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품질 높은 의사소통을 수행함으로써 '합의 지향적 의사소통 양식'을 확립할 수 있는 공중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수행하는 의사소통의 양적·질적·관계적 그리고 양식적 특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들이 고품질 의사소통을 더 많이 수행하는 관계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을 확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갈등을 토론과 협상과 양보로 극복하는 공중'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절차적·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개별 요구의 증가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더라도, 중대한 사회정치적 갈등 국면에서 '상호성', '관용', '절차성', '합리성' 등과 같은 규범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 특히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이 발전되지 않고 공유적이고 전달적 양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품질 낮은 의사소통 행위만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끝없는 반목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한국사회 민주화의 과제: 의사소통 주체의 등장과 지배적 의사소통 양식의 확립

한국사회는 지난 20년간 결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의 전반기가 정치 영역에서 제도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시대였다면, 후반기는 민주화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공고화되는 시대였다고 본다. 특히 1997년을 분수령으로 하는 후반기의 특징은 사적 영역에서의 급격한 변화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는 산업과 노동 부문의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가정과 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에 속한 개인들의 생활 세계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기업 퇴출, 워크아웃, 빅딜 등으로 산업과 노동 부문이 재편되고,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기존에 유지되던 사적 시민의 생활 세계의 기본 논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와 재계의 주도로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신자유주의'는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체제적 조직 및 조정의 원리를 재편하는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지난 20년의 후반기에, 한국사회의 국민 또는 시민들은 급속하게 재조정되는 국가와 시장제도를 직접 목격했으며, 붕괴와 대체에 가까운 생활 세계의 변화를 직접 겪은 것이다.

정치적으로 한국사회는 1980년대 말 이후 진행된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민주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이러한 성공에 조용하는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사적 이해와 이념 간의 갈등이 공론장 내의 숙의를 통해 해결되는 이른바 공적 자율성의 확립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나는 이른바 한국사회 이중민주화의 탈구(the disarticulation of double democratization) 명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중민주화의 탈구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다. 나는 여기에서 이 명제를 근거로 한국사회 민주화가 실체화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된 한 논의를 제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는 결국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문제점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주체로서의 공중의 성립, 그리고 그들의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의 확립 실패 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된다. 1) 한국사회에 '국민'과 '사적 개인'은 존재하지만 '시민성'을 갖춘 공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 그리고 2) 시민사회 활성화와 민주화의 진전으로 '공유 양식'과 '전달 양식'은 발전되어 있지만, 사회정치적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합의 양식'이 지배적으로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1) 한국사회 민주화의 문제

최장집(2002)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진단한 후, 그 원인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사회 민주화가 민주화운동과 정치권 협약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이후 민주화운동의 약화와 협약의 보수화에 의해서 그리고 이 둘의 분화에 따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 민주주의란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발전, 경쟁하는 이해관계의 사회화를 통한 접근, 그리고 정치이념을 포함한 다양한 이념적 기반을 토대로 한 폭넓은 정당체계의 재편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징후를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 간의 균열, 낮은 투표율, 교육기회를 포함한 사회불평등 강화, 언론의 정치적 지배력 강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최장집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설명에 보완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오히려 사적 이해관계와 이념들 간의 갈등적 분화를 낳고 합의의 구조를 산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논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이른바 이중민주화(double democratization)의 관점에서, 즉 국가 기구 및 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한 제도적 민주화의 달성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이념의 결집과 표출의 활성화,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며(Held, 1989; Keane, 1988),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의 갈등과 시민사회와 국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정립과 의사소통 양식의 확립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민주화의 문제 중 하나는 제도적 국가기구와 활성화된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의존적 민주화, 즉 이중민주화를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의 확립에 실패한 데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의사소통 주체인 '능력 있고 덕성 있는 공중'이 등장하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의 문제는 제도적 민주화의 성과를 통해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제 요구 간의 충돌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조정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동시에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구성인자의 자율적인 의사 표명, 정체성 확인, 결사체 형성 등의 의사소통 내용이 정당, 정부기구, 공적 기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이다. 국가는 시민이 자발적인 숙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 조정 및 합의 산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돕지 못하며(심지어 오히려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방해하며), 시민의 요구는 정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국가기구의 제도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구분해서 관찰해 보면, 이 두 영역은 각각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영역은 더디지만 적어도 제 길을 따라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제도적 민주화는 평화적 정권교체 전통의 확립,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동의, 국가 기구의 투명성 증가 등을 통해 확립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다른 한편,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민주화 이후 더욱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자기 정체성을 갖춘 제 결사체의 이해관계 추구하고 신념의 표출이 더욱 확대되고 또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체적 민주화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데 있다. 즉 법률 제정과 정책 집행에 시민사회의 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시민사회 갈등 해결에 공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국가와 시민사회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체적 민주화, 즉 이중민주화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가제도와 시민사회 간의 탈구(disarticulation)³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치적 대표 체제의 균열: 최장집(2002)이 정당하게 지적했듯이,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은 시민사회 간의 균열은 탈구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다. 먼저,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하는 정치권은 시민의 정

3 '이중민주화의 탈구'란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시민사회, 시장 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규정은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이론들의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론적 틀을 사용하는지 분명하게 하면, '탈구'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 교차지점의 제시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탈구'를 1) 교전체인 국가-시민사회 모형에 근거해서 이 두 영역 간의 대개의 부계로 설명할 수도 있고, 2) '구조변동' 시기의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공장' 모형을 이용해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에 형성된 공공장의 약화, 즉 사적 시민의 공적 문제에 대한 보편성을 통해 형성되는 공중의 공적 이성의 사용의 약화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만이 하면, 3) 코헨과 아라토(Cohen & Arato, 1992, pp.430-432)에 의해 해석된 '의사소통 행위이론' 시기의 하버마스의 이론적 틀, 즉 '체제'와 '생활세계'를 한 축으로 하고,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국가, 시장, 공공장, 사적영역' 모형에 따라 '체제'와 '생활세계'의 상호작용의 왜곡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위의 세 설명 모형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또는 새로운 설명 모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국가, 시민사회, 시장 등의 개념들이 미묘하게 달라지며, 그에 따라 '탈구'의 함의도 달라진다. 하지만 '탈구' 개념이 갖는 함의들, 즉 사회영역 간 부합함과 부합함, 그리고 그로 인한 상호작용의 부작용의 증가라는 핵심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적 요구의 수용체가 아니라, 정치권력을 거래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정당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재생산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려는 능력이 없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제 집단과 결사체의 이해관계와 이념은 정당정치로부터 이탈되어 정치세력은 물론 시민으로부터도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다.

• 정부와 사적 영역 행위자 간의 불신: 정부가 사적 영역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불신받고 있다(서문기, 2003). 예를 들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은 해당 시장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경향이 있다. 흔히 시장 규제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정작 시장에 대한 어떤 '손잡이'도 확보하지 못한 채 도입되기 때문에 의도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시장이나 교육기관, 종교단체, 취미공동체 등은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른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때론 무시한다.

• 정책적 의사소통의 탈구: 참여정부에서 관찰되는 정부, 언론, 시민 간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비난에 가까운 상호 비판은 정부, 시민, 언론 간의 탈구된 의사소통을 보여 준다(최영재, 2007). 정부는 제도화된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도와 신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고 믿고 직접 소통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일련의 정부 주도 정책이 '주류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고 있다고 믿고' 주류 언론을 공격하거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홍보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정부 정책 홍보라고 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주류 언론이 정부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비판하는 데 있다. 이렇듯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정부, 언론, 시민 간 의사소통의 탈구를 증거한다.

•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공적 규범의 부재: 사회집단과 시민사회 단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익단체들은 사회적 갈등을 숙의와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큰 갈등으로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김영수, 2003).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되지만, 그중 사적 갈등관계를 해소하는데 공적 규범의 적용 실패나 공적 규범을 확립한 경험의 부재가 결정적이다. 갈등적 사안을 접한 사회집단과 이익단체들은 흔히 광범한 의견의 청취, 숙의를 통한 사안의 정교화, 투표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입을 거부하고 일방적 주장의 반복, 대화나 토론에 대한 거부, 극단적 투쟁을 통한 해결 등에 의존한다.

만약 한국사회의 이중민주화의 탈구가 문제라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절과 균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중민주화의 핵심은 1) 제도적인 민주화의 성과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된 요구가 반영되고 조정되는 역할이 증가되면서, 동시에 2) 시민사회의 표출된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국가의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법치주의적 통치권의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상호작용 과정에 있다. 이중민주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국가의 성장에 의한 시민사회의 재편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제 집단과 결사체의 자기정체성 확인과 요구의 확대만으로는 불안정하다. 전자는 개발주의 독재체제가 선택하는 민주주의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기획된 사이비 민주주의의 왜곡'으로 진행될 수 있고, 후자는 바이마르 체제의 자진 붕괴에서 확인되었듯이 '허약한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도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상호작용하면서 상대 영역의 민주화를 돕고 스스로를 민주화하도록 재편성함으로써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문제를 '이중민주화의 탈구'로 개념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국가로부터의 개혁'이니 '시민사회의 활성화'니 하는 뻔한 답변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결국 '이중민주주의의 탈구'가 문제라고 했을 때, 절차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성과와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요구 간의 갈등의 표출이라는 조건하에서, 시민사회의 분출된 요구 간의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면서 그 조정의 과정을 민주적 규범으로 확립하는 공중이 요청된다. 그런 공중이란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civic competence and virtues) 등과 같은 시민성(citizenship)을 갖춘 사람들이다. 특히 갈등의 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른바 고품질 의사소통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과 효능감 등의 덕성을 갖춘 공중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 공론장에서의 숙의를 통해서 사회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합의적 의사소통을 지배적 양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원되고 희생하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 그리고 개별 요구의 주체로서의 사적 시민으로는 이중민주주의에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갈등하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공동체의 희생 경험에 근거한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국민의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국가기구의 민주적 통치권을 정상화하는 데 자기 요구를 활발하게 제기하고 추구하는 사적 시민의 무절제한 욕망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정상화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의 달성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립이 이루어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시민사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분화하고 투쟁하는 다양한 개별 주체들의 갈등적인 요구를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공중의 등장과 이들의 합의적 규칙을 도출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이다.

2) 국민, 사민, 공중

한국사회에 '국민(nation-people)'과 '사민(private-citizen)'은 강력하게 발달해 있다. 하지만 시민적 능력과 시민성을 갖춘 '공중(the public with civic competence and civility)'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은 폭력적 식민지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희생적 산업화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사민'도 산업화를 거친 후 확대된 사적 영역에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성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자율성을 실천하는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지닌 공중이 공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 곧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과도하게 의식화된 '국민'과 활발하게 자기 이해관계와 욕망을 추구하는 '사민'이 발전한 데 비해, 공공 영역에서 공통의 갈등적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공중'은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국민과 사민의 특성이 우리 사회의 '과대한 국가'와 '과도한 시민사회'에 끼여서 축소된 '황량한 공론장'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공유적이거나 전달적 의사소통 양식에 비해 턱없이 미발전된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이 채택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한다. 나는 우리 사회 주체의 두 존재양식, 즉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의 대변자이며 욕망의 담지자인 사민'이 무엇인지 먼저 논의하고, 왜 '공중'은 모호하게 지칭될 수밖에 없는지 논의하려 한다.

• 국민: 국민은 국가의 물질적 구성요소가 되며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의 생존과 재생산을 담당하는 기초이자 유일한 구성원이다. 국민은 국가라는 운명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항상 집합적으로 존재한다. 국민은 국체의 육체적 구성이자 재생산의 담당자로서 희생의 의무(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에 따를 것을 서로에게 명령하며 또한 명령받는 존재이다. 따



라서 국민은 흔히 국가의 성립과 함께 탄생하며, 국가의 소명을 받아 행동하는 주체(또는 신민)가 되며, 국가 전체의 위기와 생존을 통한 경험을 통해 자란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 국민은 식민지 해방투쟁, 한국전쟁, 월남파병, 압축적 산업화, 희생적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 성장했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하는데, 그 경험은 다시 '희생한 조상을 기리는 제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국민 영웅에 대한 숭배의식과 보통교육으로 강화된다. 성웅 이순신과 국민교육헌장으로 대표되는 제식과 교육은 국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장치인 것이다. 사실 '애국심'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통의 희생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Marvin & Ingle, 1999), 한국 국민의 애국심 역시 일정 부분 집단적인 희생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국민 동원을 위한 자산이 된다.

우리 사회의 '국민'을 국가적 의무를 소홀히 한 정치지도자에 대해 가혹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금강산담 관련 모금운동과 외환위기 금모으기운동에 동원되는 '위기에 대응하는 열정'은 국민이기에 유발되는 고유한 정서이며,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주요 도시의 중심에 모여 소리치는 행동 역시 국민의 고유한 제의적 행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과 국방의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청년들에게서 국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축구를 계기로 각 도시의 시청 앞에 모인 군중을 보면, 그들을 단순히 스포츠 열정에 들뜬 군중 또는 떼거리라고 보기 어려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희생의 상징인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가혹적인 응원으로 자신을 확대하다가, 승리와 패배에 한마음으로 울부짖고, 경기가 끝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지만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약을 남긴 듯이, 그렇게 해산했다. 한국사회에서 국민은 너무나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국가기구나 제도가 공식적으로 부르지도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서로 외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에 간단하게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 사민: 노동력과 자본의 교환의 기초 단위로서의 사민은 시장참여자로서, 또한 소비자로서 집단적으로 존재한다. 사적 영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의 사적 경쟁과 타협, 교환과 지배의 규칙을 따르는 사민은 가치의 생산자이자 소비적 욕망의 주체로서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한국사회의 사민은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에 의해 기획되고 관리되면서 성장했다. 시민사회가 독자적인 내적 동력에 의해 성장했다기보다는 국가적 기획에 의해 관리되고 조정되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지난 1990년대 이후, 사민은 국민 이상으로 고양된 자기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른바 '욕망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사적 소유와 소비의 주체성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노동력과 자본의 교환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예를 들어 예술, 대중문화, 교육, 부동산 영역들도 빠르게 욕구와 이해관계의 원리로 재편성하고 있다. 욕구와 이해관계의 원리란, 모든 사회적 문제는 개별 욕구와 이해관계의 추구의 상충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장에서 서의 욕구와 이해관계의 조정 거래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민은 심지어 국가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사적 소유권을 비롯한 일련의 기본권을 자기 방어의 무기로 삼는 욕구의 주체이다.

우리는 사민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할부금과 연금보험 붓기와 제테크에 열중하는 투자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충상승 의도나 축적된 재산을 안정적으로 세습하려는 의도에서 강화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교육'에 열중하는 학부모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사민을 국가의 통치권과 공론장의 여론의 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기회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개인, 집단,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역이용하는 투기적 대중이기도 하다.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사육에 가까운 교육을 통해 축적된 부의 유지를 도모하며, 상상력 없이 천박한 명품 소비적인 강남권 취향을 추구하며, 허위적 귀족이념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과시하는 개인들이야말로 현대 우리 사회 사민의 이념형인 것이다. 왜곡된 중산층 이념에 포획되어 있지만, 이를 실천하고 싶어도 능력과 기회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 포도' 비판을 하며 기회를 노리는 대다수의 소시민들도 사민의 이념을 떠받치는 인적 자원이 된다. 혹은 이들이야말로 이념적으로 사민의 행위를 내면화한 시민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구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중: 느슨하게 규정하자면, 공중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개인의 집합이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공중이란 시민성을 갖춘 근대적 공중, 즉 공통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이성을 활용하며,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는 상호작용적 개인의 집합체이다. 이런 공중은 다수의 관심사에 호기심을 보이며, 공개적으로 공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관점을 교환하는 집합체이기에, 이해와 관심의 다중성을 갖는다. 하지만 공중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다중성을 띤 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이성의 공적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의도성과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서 공중의 능력이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공통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1) 자기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2) 이러한 규칙 제정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이런 방식의 규칙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을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적 이성의 사용에 요청되는 것이 곧 공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공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참여 능력,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와 같은 시민적 덕성(civic virtues) 등이다. 이렇듯 이상적으로 보면, 시민적 능력과 덕성 등 시민성(citizenship)을 지닌 공중은 개별적 이해관

계를 따르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구성 원리를 넘어서 공공 영역에서 공통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 사안에 대한 참여자가 된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공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예컨대, 우리는 식민지 시대 황국신민으로 동원된 강제적 국민 형성 과정의 역사는 알지만, 식민지 시대의 보통교육의 보급, 문자해독률의 증가, 신문 열독을 통한 공동사안의 인식의 경험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공통 경험을 확인했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좌우 대립과 한국전쟁이 국민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어떤 공공성의 인식과 경험을 낳았는지는 모른다. 우리는 경제발전예 따라 사적 욕망을 지닌 시민사회의 개별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목격했지만, 시민사회의 이해관계 상충이 어떤 공공적 합의 형성의 기제를 만들어 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폭력적 국가 동원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요구가 제도적 민주화를 성취하는 데 공헌한 것은 알지만, 민주화 이후에 서로 갈등하며 분화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심원한 투쟁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로 유도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결국, 한국사회에 공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덕성을 지닌 공중이 존재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존재하는가, 혹은 앞으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답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3)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의 확립

민주화란 선거, 다수결, 선출된 대표, 정기적 선거 등과 같은 제도의 확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이런 제도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곧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화 이상의 것으로서 시민적 실천과 공동체 규범의 확립 등 실질적 차원을 포함한다. 민주

주의를 민주적 제도의 확립으로만 볼 경우, 다수의 폭정이나 이권에 대한 압박 등과 같은 민주주의에 수반할 수도 있는 우연한 파생물을 민주주의 그 자체나 민주적 제도의 결과로 오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질적 민주화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 법치와 자유와 같은 보편적 이념의 성취, 평등한 권리의 보장, 시민적 지혜에 대한 신뢰,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 보편적 교육 등이 실행되고 또한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행위 양식의 확립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행위 양식이 확립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한국사회에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의 상충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공정하게 조정하여, 공식적으로 합리화하는 능력을 지닌 공중이 형성되는 것이 실질적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조건에서 형성되는 행위 양식의 본질이 곧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나는 희생하는 국민과 욕망하는 시민만으로는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먼저 갈등하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공동체의 희생 경험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국민의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공통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데, 자기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시민의 무절제한 욕망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정상화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다름 아닌 시민사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분화하고 투쟁하는 다양한 개별 주체들의 갈등적인 요구를 '이성의 공적 사용'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지닌 공중의 등장과 이들의 '공적 자율성'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관찰했듯이, 분명 우리 사회의 개인들의 자기 요구는 인식되고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관계의 유지와 발전에 동반되는 '친밀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요구의 담지자인 표현적이며 수용적인 주체성을 지닌 개인들을 생산했다. 사적 개인들은 개인 간, 그리고 집단을 구

성해서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신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는 공유적 의사소통 양식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집단 구성인으로서의 개인들은 인터넷 등을 매개로 새로운 가입집단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의 예절과 관습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불공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며, 무례한 의사소통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의사소통 관여자 간에 정당하며, 공정하고, 타당하며, 타자를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가치로 확립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전달 양식 또한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파괴적으로 타인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면서도 세련된 의사소통 행위를 포괄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적 영역에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상호충돌하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공적 규칙을 제정하는 데 필수적인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을 지배적 양식으로 확립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국사회에 국민으로서의 개인과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강력하게 발달해 있지만, '시민적 능력과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인터넷 토론을 통해 주류 정치적 담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비판적 담론 공중은 등장했지만, 이들이 부정적 비판성을 넘어서 반성적 비판성을 갖추고, 갈등 극복을 위한 공동의 규칙 형성에 필요한 구성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을 확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비판적 담론 공중의 담론적 실천에 대한 모든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사하는 담론적 실천에서 포착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비판적 담론 공중의 담론적 실천이 보여 주는 특징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결핍성의 징후인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통로라

고 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문제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 표현적이며 수용적인 주체성을 경험한 개인들이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고, 타인의 비규범적 의사소통 행위를 비판하는 것, 바로 이 지점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타인의 그것들과 조정하는 데 필요한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공동체의 그것들과 일치시킬 수 있는 규칙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공중은 무엇으로 '되는(becoming the public)'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만드는(making the public)' 존재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만들'에 속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규칙 구성을 위한 합의적 의사소통 양식에 속하는 의사소통 행위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수. 2003. 「시민단체 갈등중재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5(4): 911-936.
- 김은미 · 김현주. 2004.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과 합의 형성」,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김은미 · 이준웅. 2004. 「새로운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토론 공간에 대한 소고」, 『전환기의 한국 언론』, 한국언론학회.
- _____. 2006. 「일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4): 65-95.
- 김종길. 2005. 「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속의민주주의의 조건」, 『한국사회학』 39(2): 34-68.
- 박승관. 2005. 『여론, 군론, 정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편),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소통, 매체 그리고 문화적 실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 구조」, 『한국사회학』 35(5): 119-147.
- 송호근. 1997. 「배제적 민주화와 유보된 이중전환」, 『한국민주화 10년 평가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총선 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14(2): 109-150.
- 이준웅. 2003. 「속의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실험」, 언론과 사회 정기발표회, 고려대학교 국제관.
- _____. 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2): 139-172.
- _____. 2005. 「공론장 이념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
- 이준웅 · 김은미. 2006. 「인터넷 정치 토론과 정치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3): 394-424.
- 이준웅 · 김은미 · 문태준. 2005. 「속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제17대 총선 관련 인터넷 게시판 토론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9(1): 29-56.
- 이준웅 · 문태준 · 김은미. 2006. 「사회자본과 커뮤니케이션 품질」,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19: 135-174.

이준용 · 이상철 · 이귀혜 · 유정아 · 장윤재 · 김현석. 2006. 「공공 화법과 토론, 교육
이 의사소통 능력과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최영재. 2007. 「참여정부 홍보와 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 한국언론재단 언론토론회.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
니타스.
황주성. 2005.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 공적공간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Cappella, J. N., Price, V. & Nir, L.. 2002. "Argument repertoire a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opinion quality - electronic dialogue during campaign 2000,"
Political Communication 19: 73-93.
Cohen, J. E. & Arato, A..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IT
Press.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Dewey, J.. 1954. *The public and its problems*, Chicago: Swallow Press.
Dryzek, J..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ishkin, J. 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_____. 1995. *The Voice of the People: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stil, J.. & Dillard, J. P.. 1999. "Increasing political sophistication through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 3-23.
Habermas, J.. 1962/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 Burger (T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Harasim, L. M.. 1993. "Networks: Networks as social space," In L. M. Harasim (Ed.).
Global networks: Computers and interactional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Held, D.. 1989.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esse, C.. 1991. *Publishing and cultural politics in revolutionary Paris, 1789-18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atz, E.. 1987. "Communications research since Lazarsfeld," *Public Opinion
Quarterly* 51: 525-545.
Keane, J..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_____.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London: Polity Press.
Kim, J., Wyatt, R. O.,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 387-408.
Krippendorff, K.. 1986. *Informa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Lessig, L.. 1998. "Laws of cyberspace," <http://www.lessig.org>.
Lin, N.. 2001.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In N. Lin, K. Cook and
R. S. Burt (Eds.),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s*, New York: Aldine
de Gruyter.
Marvin, C. & Ingle, D. W.. 1999. *Blood sacrifice and the nation: Totem rituals and
the American flag*, Cambridge, U. 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Grath, J. E.. 1991. "Time, interaction, and performance (TIP): A theory of
groups," *Small group research* 22: 147-174.
McLeod, J. M., Scheufele, D. A., & Moy, P.. 1999. "Communit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e rol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discussion in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 315-336.
Putnam, R. D.. 1996.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8(4): 664-683.
Price, V. & Cappella, J.. 2002. "Online deliberation and its influence - the electronic
dialogue project in campaign 2000," *IT & Society* 1(1): 303-329.
Price, V. & Neijens, P.. 1997. "Opinion quality in public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9: 336-360.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Y: Harper Colloins.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New York: Free Press.
Schramm, W.. 1971. "The nature of communication between humans," In W.
Schramm and D. F. Roberts (Eds.),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rbana,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chudson, M.. 1998.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civic life*, New York: Martin Kessler Books.
- Shigeobu, M.. 2006. "Al Jazeera exploring the public world," Paper presented at the Kyoto Forum: Information, media and public world, Doshisha University, Kyoto, Japan.
- Sola Pool, I.. 1983. *Technologies of freedom: On free speech in an electronic 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unstein, C. R.. 2000. "Deliberative Trouble? Why Groups Go to Extremes," *Yale Law Journal* 110: 71-1119.
- Tarde, G.. 1922/1969. "Opinion and conversation," In Terry N. Clark (Ed.), *Gabriel Tarde: On communication and social influ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liams, R.. 1974.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New York: Schocken.
- Young, I. M..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In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0장 새로운 안정성 발판의 구축:

긍정성 중심의 변화

_ 김명언(서울대 심리학과)

"1997년 11월의 IMF 외환위기는 6·25전쟁 이래 최대의 고통을 안겨 줬다고 할 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희생을 초래했어요." 외환위기 직후 약 12개월 간 수습정책을 총괄했던 재정경제부 장관의 10년 후 기자간담회에서의 회고다(박석규, 2006). 실직자, 도산자, 파산자 등 직접적으로 외환위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 더해 이들과의 가족적·사회적·경제적 연결고리로 인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합하면 거의 모든 한국의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의 피해자다. 하지만 10년이 거지반 지나간 이 시점에서 IMF 외환위기는 한국인의 기억창고에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외세 통제와 우리의 굴복, 파산, 실직, 신용불량, 이혼, 가족파괴, 아르바이트 쫓김, 98학번의 동아리활동 부재 등의 부정적 기억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금모으기운동, 불우학우 돕기운동, 가족원들 간의 화해와 결속 강화 등의 긍정적 사건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수 국민들에게는 과거의 쓰라린 사건이고 잊고 싶은 하나의 외상적 사건임에 반해 소수에게는 위기가 선물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본 줄고에서는 우선,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환란의 10년간 파장

인터넷 공론장의 매개된 상호가시성과 담론 공중의 형성*

이 준 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공중의 형성’을 설명하는 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공론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상호작용 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삼자적 관찰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의사소통 효능감을 경험하는 과정에 공중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의 전제로서 나는 먼저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서의 공중’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공중은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존의 인식’과 ‘공적 관여의 감각’을 경험하는 공적 자아의 연결이 된다. 또한 공적 자아의 연결이 가능한 조건을 찾는 것이 공중 형성의 조건을 찾는 것과 같다. 그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공론장의 구조적 조건 중의 하나인 가시성 조건을 검토한다. 현대 인터넷 매체가 형성하는 공론장은 ‘매개된 상호가시성’ 조건을 구현하며, 따라서 상호작용 참여자가 자기와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가시성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런 가시성 효과가 개인의 의사소통 효능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시성 효과에 따라 인터넷 공론장에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면서 의사소통 효능감의 신장을 경험한 개인들이 담론 공중을 형성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Key Words : 인터넷 공론장, 비판적 담론공중, 공중, 의사소통 효능감

* 이 연구는 2007년 LG연암문화재단의 해외교수파견 지원을 받은 연구입니다. 이 글의 초고에 조언과 비판을 해 주신 많은 분들과 원고에 대해 꼼꼼한 지적을 해 주신 <언론정보연구>의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jwrhee@snu.ac.kr

1. 문제 제기

정기적 선거의 실시, 책임지는 행정부, 기본권의 보호 등 제도적 민주화는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조건이지만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민주적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권을 지닌 자들의 관심과 이익이 정당하게 의제화되지 않는다면, 의제에 대한 토론의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민주주의라 부르기 어렵다(Dahl, 1989). 즉 민주적 정치과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과정 요인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도를 운영하고 과정을 실천하는 실행 주체가 있어야 한다. ‘공중’ 또는 ‘시민’ 개념은 바로 그런 주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¹⁾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시도로서 시민적 능력과 덕성(civic competence and virtues), 즉 ‘시민성을 갖춘 공중(the public with cultural citizenship)’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공중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이유는 역시 민주주의는 제도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회라도 그 사회가 이상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직한 시민’이란 이상화된 모형이 있기 마련인데(Schudson, 1998), 특히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란 개념은 민주적 제도의 운영과 과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의 실행 주체, 즉 공중은 충분히 발전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과연 공중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

1) 시민 개념은 공중 개념과 비교해서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함의를 가지며 따라서 여러 맥락에 두루 적용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추상적이며 적용가능성이 높은 ‘공중’ 개념을 사용하고 ‘시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하는 한정적 의미로만 사용한다. 먼저 시민(citizen, Burger)은 말 그대로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의미를 갖지만, 실은 도시에 거주할 만한 자원과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지방 귀족과 농민, 그리고 도시의 귀족과 빈민 등과 구분되는 취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즉 시민적 식사나 의복은 귀족의 낭비적이며 과시적인 것도 아니고, 빈민의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나 아무렇게나 걸치는 옷도 아닌 어떤 구체적인 취향과 문화의 양식을 함축한다. 결정적으로 시민 개념은 ‘부르조아지’ 즉 서구 역사에서 특정한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계급이란 함의를 갖는데 특히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다.

떻게 하면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민주적 정치 체제의 주권자인 공중을 시민성, 즉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개인들의 집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Barber, 1985; Dahl, 1989). 일단 시민적 능력을 공적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자. 또 시민적 덕성이란 개인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관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자질이며, 여기에 용기, 배려, 관용, 예절 등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덕목들이 포함된다고 하자. 그런데 이런 시민적 능력과 덕성은 민주주의의 실행 주체의 이상화된 모형으로 전제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과정과 행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평가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중의 투표 참여율이나 정보 활용 능력 등은 민주주의 과정이 유지되는 필수 조건으로 가정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 실행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한 사회에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활발하게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는지 검토함으로써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기준 삼아서 이상화된 모형으로서, 그리고 경험적 주체로서의 공중을 논의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공중의 형성’을 설명하는 한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공론장의 새로운 가시성 조건에 힘입어 의사소통 효능감을 경험한 개인들이 담론 공중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소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몇몇 이론적 전제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먼저 공중이란 무엇이며 국민이나 사민과 같은 다른 집합적 주체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논의하려 한다. 그리고 ‘공적 자아의 연결을 통한 공중의 형성’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공중이란 의사소통 상호작용 조건에서 활성화된 공적 자아가 ‘공존의 인식’과 ‘공통 관여의 감각’을 갖게 됨으로써 형성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인터넷 환경에서 공적 자아의 연결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의 매개된 상호가시성이란 개념도 소개한다. 결국 인터넷 공론장에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의사소통 효능감의 신장을 경험한 개인들이 ‘담론공중’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루어진 인터넷 토론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터넷 담론공중의 시민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공중의 형성 조건

이 절은 공중의 등장 또는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공적 자아의 연결로서의 공중’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공중 개념은 리프만과 듀이의 ‘공중’ 개념을 둘러싼 논의, 즉 이른바 ‘공중의 문제’를 정교화 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공중을 공적 자아의 연결로 이해함으로써 공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공중의 등장과 시민성 모형

최근 새로운 시민참여 양식의 등장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중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시되곤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나 민주화 이행 시기의 시민참여는 선거기간 중 투표나 캠페인 활동 등에 제한되었으며,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명 및 행동적 참여는 시민운동 및 학생의 민주화 요구 또는 노동자 계층의 권익 요구 등에 제한되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시민적 참여 행위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그 참여자의 속성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특히 2000년 이후 인터넷 매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의견을 확인하거나 교환하고, 다시 모금이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집합적 실천을 행하는 양상이 등장했다. 이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에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담론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행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중이 등장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른바 “비판적 담론공중”(이준웅, 2005) 또는 “감성적 참여공중”(최영재, 2008)등의 등장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공중의 등장’에 대한 담론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 새롭게 관찰되었던 일련의 시민참여 양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참여 양식을 보여준 개인들의 집합으로서의 ‘공중’이 우리사회의 전면에 등장했음을 주장함으로써, 기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시민적 능력과 덕성의 수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정치적, 사회적 양과 질의 증가를 신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중은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는가? 즉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

을 거쳐서 단순한 개인의 집합이 아닌 일정 수준의 능력과 덕성을 갖춘 집합적 주체로서 등장하는가? 공중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참여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그럴듯한 묘사나 스케치를 제시할 뿐,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중의 등장 조건을 검토하기 위한 단서를 췌슨(Schudson, 1998)의 시민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의 주체가 쇠락했다는 비판에 답하기 위해, 미국 민주주의가 변화해 온 궤적을 그 주체인 시민의 특성, 즉 시민성의 변화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시민 모형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탐색해서 (1)순종적 시민성(deferential citizenship), (2)당파적 시민성(partisan citizenship), (3)정보적 시민성(the model of 'informed' citizen), (4)권리의식적 시민성(rights-regarding citizenship) 등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췌슨의 미국 민주주의 주체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도 흥미롭다. 그런데 나는 그의 논의로부터 다음 두 가지 논점을 도출해서 우리 사회의 공중의 등장 조건과 연관시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시민 또는 공중과 같은 민주주의의 집합적 주체는 이념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다양한 양태를 갖는다. 췌슨의 논의를 따르면, 민주주의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제도와 형식으로 정착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적 속성과 이상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예컨대, 췌슨은 먼저 19세기 초 미국 시민은 일부 엘리트의 정치적 주도권 행사에 순종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실제로 그런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이르면 정파적 정당 활동에 동원되고 또한 참여하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기 등장하는 데, 이런 정당 참여적 시민의 특성들은 역사적으로 다음에 등장한 '정보적 시민성'과 '권리의식적 시민성'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주체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떠나서 경험적으로 이렇다거나 이념적으로나 이래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

둘째, 췌슨의 저서를 통해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 집합적 주체의 모형이 변화한다는 이해를 얻을 수 있지만 도대체 그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변화의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을 구하기는 어렵다. 미국 시민의 집합적 의식과 실천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한 그의 논의는 단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서로 다른 특성의 시민들에 대한 기술을 제공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슨의 논의로부터 변화의 조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공중의 특장의 조건이 그들이 사용하는 매체의 특성,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등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개인의 매체 이용과 상호 연결 방식이 ‘공중의 등장’과 연관을 갖는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찍이 가브리엘 타드(Tarde, 1898/1969)는 신문의 유통과 이용 그리고 신문 독자들 간의 대화가 공중의 등장과 여론의 형성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췌튼의 논의에서도 정치 엘리트의 출판문화의 성립, 정론지의 동원적 기능과 세력 확대, 상업적인 대중 매체의 등장과 성공, 그리고 인권 운동을 매개적 현실로 제시한 텔레비전 문화의 확립 등이 시민성의 변화와 관련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췌튼 자신은 직접 ‘매체 이용과 시민성의 변화의 관계’를 설명 모형으로 정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매체 이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중의 형성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구해야 한다. 첫째, 도대체 공중이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매체 이용이 공중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 이 장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전제를 확보하려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진다.

2) ‘공적 자아의 연결’로서 공중

공중의 형성을 설명하기 전에, 공중의 형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견 공중이란 어떤 특별한 성질을 지닌 개인들이 결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공중의 형성이란 대중이나 군중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집합적 주체가 등장하는 과정이 된다. 하지만 대중이나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공중을 구성하는 개인과 다른 개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공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대중이나 군중을 구성하는 존재들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가 ‘스스로를 공중으로 만든다’고 본다(이준웅, 2007). 여기에서 ‘스스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조건이나 수준을 만족시키는 개인들이 모여서 공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 해결과정에 참여함으로

써 개인의 공적 자아를 확장하는 순간 ‘집합적으로 공존을 인식하고, 함께 공동의 관심사에 관여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결국 공중의 실체는 바로 이 ‘공존의 인식’과 ‘공적 관여의 감각’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과 감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나는 공중의 등장 또는 공중으로의 변화를 ‘개인의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 전환시켜 이해할 때, 공중의 경험적 등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관찰 되는 급격한 시민참여 양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특정한 능력이나 덕성을 지닌 개인들의 집합’으로서의 공중이 아닌 ‘공적 자아가 활성화된 개인들의 행위가 상호 작용함으로써 가시화된 연결성’으로서의 공중 개념이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는 개인이 지닌 특정한 능력이나 덕성의 정도나 수준의 변화로 설명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즉 특정 성질을 갖춘 개인이 모여서 공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공적 자아가 서로 연결되어 공중을 구성한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이런 설명적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집합적으로 보면 ‘공중의 등장’이라고 기술할 수 있는 시민적 참여 양식의 변화를 개인적 수준에서 관찰되는 공적 자아의 발현과 연결이란 개념으로 분석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공중의 등장이나 변화를 개인들 간의 연결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이런 공적 자아의 연결이 가능한지도 질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촛불시위에 참여한 자들 중에 인터넷 요리 동호회인 ‘82쿡’에서 활동했던 주부들이 있다. 평소에 요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자랑하고 평가 받는 활동을 하던 취미 공동체의 회원이었던 주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참여적 공중의 일원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과도하다. 인터넷 고전음악 동호회인 ‘고클래식’ 회원들을 봐도 마찬가지다. 그들 중 일부는 깃발 들고 김밥까지 싸들고 나가 정기적으로 촛불 시위에 참여했으며, 참여 경험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다시 새로운 참여를 조직했다. 촛불 정국 이전에 고클래식 회원들 간에는 평소 정치적 토론이 그리 많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들 중 사회정치적 참여에 나설 것처럼 보였던 이도 별로 없었다. 그런 이들을 놓고 과거에는 정보적 능력과 참여적 덕성을 지닌 공중의 일원이 아니었다가 갑

자기 촛불집회에 즈음해서 능력과 덕성을 지닌 공중의 일원으로 전화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역시 무리라는 것이다. 집합적 주체의 능력과 덕성이란 그렇게 쉽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82쪽이나 고클래식 회원들 중에서 일부 개인들이 공중이 아니었다가 공중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만약 이런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그 개인들이 공중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이상하다) 그들을 포함한 모든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른바 ‘공적 자아’가 인터넷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표현되고 전달됨으로써 그들 간 ‘연결’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다. 뒤에서 구체적 검토하겠지만, 여기에서 ‘연결’이란 어떤 가시성에 의해서 ‘공존의 인식’과 ‘공적 관여의 감각’을 갖게 된 것을 지칭한다.

‘공적 자아의 연결로서의 공중’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이들의 집합적 행위가 사실은 소비자로서의 구매행위 또는 관중으로서의 관람 및 응원 등과 행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공중은 공적 사안에 관심을 갖는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어 형성된 집단이라면, 소비자나 관중은 욕구와 취향의 담지자인 사적 자아들이 결합된 집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개인들은 일상적으로 소비자로서 상품 정보를 구하고, 구매 판단을 하고, 실제로 구매 행위를 한다. 이런 개인들이 특정 조건에서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면 공중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형성하고, 판단을 내리고, 또한 공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소비 주체, 즉 소비자(consumer)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단순한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소비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참여 행위를 포괄하는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Shah, McLeod, Friedland, & Nelson, 2007). 그런가 하면, 개인들은 심지어 개별적인 취향과 관심의 주체로서 사회적 스펙터클에 참여하는 관중(spectators)이 되기도 하는데, 박람회 참가, 쇼핑물 방문, 스포츠 관람, 영화 및 텔레비전 시청 등과 같은 집합적 행위는 일회적이기는 하지만 공통의 경험을 창출하며, 또한 반복적인 경험의 누적에 따른 공통 문화를 형성한다(Butsch, 2008). 관중을 구성하는 개인들 역시 특정한 조건에서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면서 공중으로 전화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이런 공적 자아가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이렇듯 활성화된 공적 자아는 어떤 조건에서 서로 결합되어 집합적 주체로 스스로를 드러내느냐는 것이다. 덧붙여, 한국 사회의 시민참여 양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무엇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공중으로서 공적 자아를 강화하고 발현하는 일이 빈번해 졌느냐고 물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먼저 공적 자아란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한국 사회에 ‘국민’과 ‘사민’은 강력하게 발달했지만, 이른바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공중’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정과 관련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준웅, 2007). 이 주장의 타당성과 별개로 여기에 언급된 ‘국민’, ‘사민’, 그리고 ‘공중’ 등 집합적 주체가 서로 다른 공적 자아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임을 논의함으로써 제기된 질문에 답하려 한다.

3) 국민, 사민, 공중과 공적 자아

국민, 사민, 공중 등은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집합적 주체들이다. 먼저 국민(nation)은 국가라는 운명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합적 주체로서 공통의 역사성을 지니며, 공통의 운명을 경험하며, 국민적 교육에 의해서 강화되는 공적 자아들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은 국체의 육체적 구성이자 국민적 생산과 재생산 기초로서 국방과 납세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국가의 호명에 답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고 집합적으로 애국심을 과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사민(rights-bearing citizens)은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 이해, 권리에 대한 주장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공적 자아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적 권리의 주체로서 시장에서 노동력과 상품을 교환하는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 사민으로서의 공적 자아가 중요한 이유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한 종교나 양심의 자유의 주장, 소비자 주권 운동, 노동자의 권익 주장 등과 같은 집합적 의지나 행동이 바로 이런 개인의 요구, 이해, 권리에 대한 주장이 없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개인들은 국가나 사회 등과 같은 외부적 권력이나 권위에 대항해서 자신의 요구, 이해, 권리 등을 주장하는 ‘자율성의 주체’로 결합되어 집합적 주체인 사민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공중(publics)을 구성하는 공적 자아는 국민이나 사민을 구성하는 자아와 내용적으로 구별된다. 그것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공통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기초로,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이런 공적 자아는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민이 추구하는 개별적 이해관계의 추구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중을 구성하는 공적 자아는 공동체의 안정이나 발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이성의 공적 사용’에 필요한 의지와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간주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공적 자아는 개인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확인되는 ‘집합적 개인들의 경험적 상태’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의지와 능력이 전제된 이념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사민, 공중 등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서로 다른 차원의 공적 자아에 의해 형성된다. 그 자아란 개인의 유지와 발전이 타인과 공동체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결정하는 사회관계성을 지니는 데, 이런 관계성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결국 개인들은 (가)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충성하며, 또한 (나)사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데 열심이면서, 동시에 (다)시민성을 갖춘 공중으로서 공적 문제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자아를 각각 또는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행동에 이 세 가지 공적 자아가 동시에 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들 중의 하나 또는 둘의 결합이 행위를 구성한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 사민, 공중은 서로 겹치며 서로 섞여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공적 정향성을 갖춘 공적 자아들이 결합됨으로써 집합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집합적 주체를 구성하는 공적 자아는 개인의 보존과 요구,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사적 자아에 대비된다. 즉 공적 자아와 별도로 개성과 정체성의 담지자이며, 개인적 선호와 취향의 결정자인 사적 자아가 있다. 결국 개인이란 사적 자아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공적 자아를 지닌 일종의 결합체인데, 조건에 따라서 특정 공적 자아의 결합은 집합적 주체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경험적으로 사민, 국민, 공중은 서로 겹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세 공적 주체가 서로 다르

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 다른 개인의 집합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공적 자아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중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공중을 주체로 삼는 정체에 대한 이론의 내용도 달라진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여기에서 어떤 ‘이상화된 공중’ 개념이 별도로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서의 공중이란 현실적이고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공중 개념을 기초로 다음에 논의할 이른바 ‘공중의 문제’에 대한 답변의 단초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공중의 문제’와 의사소통의 조건들

개인은 취향과 이해관계의 담지자인 사적 자아를 포함하며, 이런 사적 자아가 결합해서 ‘사적 집단의 구성원’, ‘소비자 집단’ 또는 ‘관중’ 등을 이룬다. 개인에게는 또한 ‘국민’, ‘사민’, 그리고 ‘공중’으로서의 공적 자아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공적 자아들의 결합이 집합적 주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공적 자아가 결합해서 민주주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공중으로 발현되는가? 언뜻 생소해 보이는 이 질문은 사실 오래 전에 다른 방식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른바 ‘공중의 문제’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20세기 초 혼란스런 미국 사회에 대한 월터 리프만과 존 듀이의 공중에 대한 논의에서 이 문제의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다(McAfee, 2004). 리프만(Lippmann, 1922, 1925)은 1920년대 미국 사회가 약화되는 까닭으로 무지하고 무력한 대중의 등장을 지적했다. 미국 대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이며 선전과 여론조작에 놀아나는 등 당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시민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 민주주의가 이런 대중에 의존해서는 암울하다고 전망하고, 선전과 여론조작에 조종당하지 않는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이 중용되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리프만의 비판론에 대응해서, 듀이(Dewey, 1927)는 한 사회의 발전에 공중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가능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 했다. 그는 먼저 공중 없이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한데, 그 공중이 완전한 능력을 갖춘 존재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공중의 능력이란

인간 행위의 원인과 그 행위가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을 연결해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데, 이를 통해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판단을 돕는 자유로운 소통과 공개이며, 따라서 문제는 그런 소통과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개인들 간의 연결 조건’이다. 듀이는 공중의 문제(the problem of the public)란 그런 소통과 공개를 위한 ‘논쟁, 토론, 설득의 방법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듀이의 주장에 따르자면, 공중의 행동은, 혹은 개인들의 공적 자아의 결합에 의한 집합적 행동은 반드시 합리적이며 지식수준이 높고 윤리적 덕성에 기반 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개인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하며, 필요하다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여부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인들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따라서 그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의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즉 개인의 공적 자아가 활성화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대하고 있는 공존 인식을 갖고 그 문제에 대응하면서 공동 사안에 관여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사실에 기반 해서 상호 연결될 수 있다. 즉 상호 연결이란 ‘공존 인식’과 ‘공동 관여의 감각’이다. 이런 연결이 곧 공중의 형성이며, 따라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으면 된다.

국가적이거나 민족적인 선전과 선동이 횡행하고 대중 매체의 무차별하고 일방적 메시지 제공 이외에 다른 정보 습득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시대, 즉 리프만과 듀이 시대에 개인 간 연결을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 조건을 찾는 것은 어려웠을지 모른다. 따라서 리프만이 요구하는 수준은 물론 듀이가 기대한 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적 자아의 연결을 위한 의사소통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수준과 정도의 참여가 가능한 현대 매체 이용자들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그 사안을 실행하는 데 공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제는 어떤 조건에서 공적 자아의 결합을 통한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집합적 주체가 등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특히 인터넷과 이동 매체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른바 ‘공중의 문제’를 뒤집어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듀이는 결국 ‘공중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이 집합적 토론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들이 능력과 덕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시했다. 듀이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공중의 능력과 덕성을 계발하기 위한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과 연관된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이동 매체 등 새로운 매체의 발전에 의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조건을 디자인해서 제시함으로써 듀이의 문제에 직접 답할 수는 없을까? 이제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 이용 행태와 연결된 집합적 토론과 새로운 참여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구조적, 규제적, 물질적 조건에서 우리가 바라는 시민적 토론과 참여가 활성화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어떤 조건에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정보의 교류, 의견과 해석의 추구, 집단적 관심의 형성 등이 확대되어 공적 자아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지 인터넷 의사소통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공중의 문제’라고 본다. 인터넷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적 토론과 참여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의사소통 조건에서 공중의 시민적 능력과 덕성이 드러나는지 탐색하고, 그 조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중의 형성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인터넷 매체의 이용과 의사소통 가시성 효과

공중의 형성을 공적 자아의 연결로 이해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런 ‘연결’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연결’이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장에서 나는 공론장의 가시성 개념을 이용해서 이 질문들에 답하려 한다. 요컨대 의사소통 매체를 이용한 공적 상호작용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가시성의 특성에 따라 공적 자아의 연결방식이 달라지는데, 특히 인터넷 매체의 이용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가시성 구조가 새로운 공중의 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공론장과 가시성 조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공론장과 가시성 조건

하버마스(Habermas, 1989)가 제시한 근대 시민 계급의 공론장 형성과 현대적 변동에 대한 논의는 근대 공중의 등장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근대적 공론장의 조건은 서적, 신문, 팜플렛 등 인쇄매체의 보급과 커피하우스와 독서 클럽 등의 토론 공간의 형성에 따라 공개적이며, 평등하며, 합리적이며, 공적인 담론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시민 사회의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국가의 지배적 통제에 대항해서 형성되는 것이 곧 근대적 공론장의 실질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나 그간 하버마스가 기술한 공론장의 역사적 형성이 과연 정확하고 충실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Hohendahl, 1979; Nathans, 1990; Peters, 1993; Zaret, 1992), 그가 설명한 공론장의 구성적 조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시되었다(Frazer, 1992; Negt & Klug, 1993; Speier, 1952). 그러나 공론장 개념은 역사적이며 사회학적 범주로서의 공론장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공적 담론 행위가 갖는 함의를 이론적으로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공론장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이며 구조적 비판을 모두 받아들여, 공론장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다. 비판을 수용한 확장된 공론장 개념은 다양한 담론적 실천이 경연되는 다중적이며 다원적인 공론장 개념이 된다(이준웅, 2004). 따라서 그것은 (1)공론장에서의 공적 담론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2)참여 당사자들의 비판적이며 합리적 토론뿐만이 아닌 협상과 조정을 포함한 전략적 의사소통 그리고 인사하기, 이야기하기, 고백하기 등 개인의 사적 경험을 반영한 정서적이며 일화적인 의사소통이 포함되었으며, (3)때로 공론장 내부의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실력자가 여론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 일종의 비대칭적 의사소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공론장을 (4)하나의 단일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통 영역으로 보는 것보다, 개별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개별영역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는 교호영역,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통영역이 중첩된 일종의 다중적 네트워크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5)정부 기구와 시민 사회 간의 공적 의사소통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이 공론장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장 개념을 재맥락화해서 이해하면 결국 고전적 공론장 개념이 갖는 특정성은 약해지고, 따라서 그 개념이 갖는 설

명적 특성이 실종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평등하지 않았고(심지어 그럴 필요도 없으며), 대체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사적 경험과 이해관계를 포함한 감성적이며 일화적인 것이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면, 공론장이란 거의 모든 공적 의사소통을 포함하기에 별로 설명력이 없는 개념이 되고 만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구조적이며 규제적 조건(structural and regulative conditions of communication)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본다. 확장된 공론장 개념은 거의 모든 공적 의사소통을 포괄하기 때문에 설명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따라 어떤 구조적 조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떤 규칙과 규범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함으로써 공론장 개념을 설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조적 조건’이란 역사적 공론장의 공간간적 특성, 매체 기술의 발전, 매체의 보급률, 공론장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 등을 포함한다. 즉 공적 의사소통의 참여자, 내용, 행위 등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조건을 의미한다. 뒤에 논의하겠지만, 공론장 참여자간의 ‘가시성’은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조건 중의 하나이다.

‘규제적 조건’이란 의사소통의 규범과 관련된 것이다. 공론장의 규제적 조건의 사례는 하버마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18세기 서유럽 시민 계급의 문예적 토론이나 정치 토론에 공개성, 평등성, 합리성 등과 같은 규범이 내재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공론장, 즉 공적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그런 규범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확장된 공론장 개념은 공론장의 참여자, 상호작용 과정, 의사소통 방법, 의사결정 방법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규범들의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페레와 그 동료들(Ferree, Gamson, Gerhards, & Rucht, 2002)은 공론장의 정치적 기능에 따라 (가)대의제 엘리트 공론장, (나)대중 참여적 공론장, (다)시민의 담론적 공론장, (라)주변부 계층의 구성주의적 공론장 등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론장에는 다른 규범과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톰슨(Thompson, 1995: 120-125)이 제시한 가시성(visibility) 개념은 공론장의 구조적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에 따르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에 따라 공과 사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공개성과 비공

개성, 노출과 비밀,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구분에 따라 공공성, 즉 공론장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공공성이란 개념적으로 결국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접근성과 관련있고 누구에게나 드러난 노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기존 논의와 일치한다(Dahlgren, 1995; Geuss, 2001; Sennett, 1978). 톰슨은 고대 희랍의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를 비교하면서, 전자는 면대면적 공존(co-presence)에 따라 구성된 공론장이었다면, 후자는 인쇄 매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공간적으로 분리된 개인들이 같은 공개된 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매개된 공공성(mediated publicness)’이라고 본다.²⁾ 톰슨은 현대의 전자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상징적 형식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매개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경험함으로써 공공성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나는 이런 주장을 받아 들여,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확장시켜 ‘여러 담론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중적 네트워크’로 볼 때, 그 공론장의 구조적 특징 중의 하나인 가시성 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중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2) 공론장의 특성과 가시성 조건³⁾

공론장의 구조적 성격의 변화를 가시성 조건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떻게 상호작용 했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공론장에 참여하는 자들이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찰 가능성의 특성이 공론장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다. 공론장의 구조적 조건 가운데에는 시공간적 제약성, 주요 매체의 기술적 특성, 매체 이용자의 상호작용 양식의 변화,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집합적 행위자의 성격 등이 있다. 나는 특히 가시성 조건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공론장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2) 듀이(Dewey, 1927, 12-13)가 이해하는 ‘공적인 것’의 개념은 톰슨이 제시한 ‘매개된 공공성’ 개념과 유사하다. 즉 그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자들을 넘어서 행사되는 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공적인 인식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듀이가 이해하는 공공성은 면대면적 공존 관계를 넘어서 행사되는 직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 염려에 의존한다.

3) 이 장에서 이어지는 논의의 초고는 2008 정보통신연구원 보고서인 <방송융합시대 시민참여 변화와 정책적 함의>의 한 절로 실린 바 있다.

<표 1> 시대별 공론장의 가시성 조건

	고대	근대	현대	당대
상호작용 참여자	설득자, 변론자, 공연자 대 시민	필자 대 독자, 독자 대 독자	출연자, 제작자 대 수용자	모두 대 모두
주요 매체	구두 매체	출판 매체	방송 매체	네트워크 매체
집합적 행위자	관중	독서 공중	수용자 대중	담론 공중
공적 행위의 범위	시공간 공유	시공간 초월적	주로 공간 초월적 시간 공유	시공간 동시적 재배열
가시성 조건	직접적 상호가시성 (direct intervisibility)	상상된 가시성 (imagined visibility)	대량 매개적 가시성 (mass mediated visibility)	매개된 상호가시성 (mediated intervisibility)

<표 1>은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의 가시성 조건을 제시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고대의 면대면 민주주의에서 구현되었던 ‘직접적 상호가시성(direct intervisibility)’이 이제 네트워크 매체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구성되는 공론장에 고유한 ‘매개된 상호가시성(mediated intervisibility)’이란 고대 사회의 민회, 법정, 제식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적 의사소통의 가시성이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의 사용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을 지칭한다.

먼저 고대 사회의 민회, 법정, 장례식 등에서 이루어진 연설과 설득은 육성을 통해 전달되는 시민들에게 직접 노출됐다. 이런 레토릭적 실천을 행하는 정치인, 변론자, 의례 지도자 등의 의사소통 행위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공적 노출이 갖는 역동성에 있다. 고대 사회의 면대면적이며 공개적인 노출에 근거한 집회와 행사의 공개성이 그것들의 정치적, 사법적, 의례적 레토릭과 공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연설하는 정치적 시민, 변론하는 소송하는 시민, 그리고 축사나 애도사를 하는 지도적 시민 등은 ‘시민 관중들’에게 자신의 말과 행위를 노출하고 과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시민들 사이의 참여가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상호 노출에 의한 공존 경험의 곧 공적 인식을 만들어 낸 핵심 기제였다는 것이다(Ober, 2008). 레토

력은 고대적 공적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상호작용 양식이었다. 민회, 시민법정, 극장 등에서 이루어진 레토릭적 의사소통은 고대 사회의 면대면 상호작용에 내재한 직접적 상호가시성(direct intervisibility)을 통해서 담론적 질서를 구성했다. 그리고 민회에서, 시민법정에서, 극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전장에서 공통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가시화되는 것이 고대적 개인의 공적 자아가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근대 시민혁명기의 공론장은 매개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하버마스가 포착한 ‘문예적 공론장’과 ‘정치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진 출판물 등을 매개로 이루어진 토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작업장이나 거리의 대중적 시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통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적 행동이다.⁴⁾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자면, 근대적 공론장의 그 무엇 때문에 인쇄 매체 등을 읽고 토론했던 개인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보편적 인권과 공적 규범을 받아들이는 공중으로 전화했느냐는 것이다. 나는 근대 신문, 소설, 뉴스 책, 팜플렛 등 출판물의 유통에 의해 이루어진 매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초월한 이른바 예상된 독자 공중(reading publics)의 관심과 반응에 작용하는 또 다른 독자가 있음을 상상하는 가시성, 즉 ‘상상된 가시성’이 작용했다고 본다. 즉 근대적 가시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민 계급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서 공중이 시간 및 공간 초월적 상상을 통해서 구성한 ‘독자-필자’간 그리고 ‘독자-독자’간에 이루어지는 가시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영화와 텔레비전 등 전자 매체의 발전은 현대의 가시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 조건이 등장했다(Thompson, 1995). 현대 방송 매체 수용자들은 고대의 직접적이거나 과시적인 가시성이나 근대의 상상된 가시성의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시성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공적 사안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 개인들은 비록 각각 개인적 취

4) 시민적 공론장의 상상된 가시성만이 근대적 가시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시민적 공론장과 구분되는 하층민의 집단 노동과 오락 경험에 기반한 이른바 ‘평민적 공론장’도 있었다(Negt & Klug, 1993). 또한 광장이나 거리, 작업장 근처에서 발생했던 집회와 시위에 의해서 확인되는 공적 상호작용은 직접적으로 가시적이었다. 광장과 거리, 그리고 작업장에서 실현된 가시성은 직접적 노출에 따른 영향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고대의 직접 민주주의의 직접적 가시성과 유사하다. 따라서 고대의 직접적 상호가시성이 시대가 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가시성으로 대체된다고 보기보다는 확장되고, 변형되고, 진화해왔다고 보는 편이 옳다.

향과 관심에 따라 다른 수용적 위치에서 뉴스를 보게 되지만, 그와 같은 개인들이 반복적으로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한 실제 그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되는 ‘매개된 가시성’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현대의 전파 매체와 수용자 대중의 상호작용에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가정하고 있는 ‘이성주의 편향’과 ‘면대면적 대화주의 편향’을 넘어서 새로운 가시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매개된 가시성을 통해서 공유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전자 매체가 제공하는 내용을 통해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 등과 같은 공통의 경험을 갖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매체 이용자가 처한 공간적 맥락 차이를 넘어서 대량으로 매개되고, 따라서 어느 누구의 일방적 통제도 어려운 공통의 경험을 낳고, 대화적이 아닌 일방적인 가시성에 근거해서, 개인은 최소한 잠재적이거나 ‘주목하는 공중(attentive publics)’으로 전화한다.⁵⁾

인터넷 매체의 이용이 다중적 공론장(multiple public spheres)을 형성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론장의 가시성 구조는 별로 논의된 바 없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은 고대의 ‘연설가와 관중’, 근대의 ‘필자와 독자 공중’, 현대의 ‘출연자와 수용자 대중’ 간의 상호작용 등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의 가시성 조건을 제공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잠재적인 독자이거나 필자이며, 출연자이자 관람자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용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남길 수 있다. 조회수, 검색수, 댓글, 찬성과 반대, 트랙백 등으로 남게 되는 정보들은 인터넷 공간의 가시성을 증거한다.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으며 또한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 인터넷 매체 시대의 가시성은 과거 가시성의 다양한 양상을 포괄하기도 한다.

5) 방송의 수용자는 먼 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나 대형 참사에 대한 방송 뉴스를 보면서 ‘불안정하고 약하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Thompson, 1995). 이런 방송 수용자를 이성적이고 참여하는 공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유된 현상에 대해 공감하고 반응하는 집합적 주체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들과 같은 ‘주목하는 공중’의 존재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감시적 시민성(monitorial citizenship)의 구성 요건이 된다(Schudson, 1998).

즉 고대의 상호가시적 공공성, 근대의 대화적 공공성, 현대의 대량 매개적 공공성 등을 일부 구현하는 서로 다른 가시성들이 중첩되어 있다. 나는 특히 고대의 민회, 시민법정, 극장의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직접적 상호가시성이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이용자들 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에 주목해서 인터넷 시대 공론장의 가시성을 ‘매개된 상호가시성’이라 부른다. 매개된 상호가시성은 고대 면대면 민주주의가 구현했던 직접적 상호가시성을 재현하면서, ‘효과의 가시성(visibility of effects)’을 실현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인터넷 매체의 이용 환경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전개되어, 후속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공론장이 인쇄 매체나 전자 매체의 이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공론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가시성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인터넷 환경에서 가시성 효과와 ‘자기관찰적 환경’의 형성

인터넷 매체 환경이 구현하는 ‘가시성’이란 인터넷 매체 이용 및 활용은 물론 그에 따른 후속적 반응과 효과가 모두 기록되고, 검색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기에 인터넷 행위의 효과가 바로 그 행위자는 물론 다른 이에게도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읽기 행위는 조회수로 저장되고, 평가는 추천수로 확인가능하며, 개인이 쓴 글에 대한 반응은 이런 조회수와 추천수에 대한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확인가능하다. 이런 ‘효과의 가시성’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가시성 효과(the visibility effects)’로 나타난다. 즉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개인은 (가)그 자신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삼자적 관찰 경험을 갖게 되며, (나)자신과 타인의 인터넷 활동을 포함한 집합적 행동 과정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덧붙여 (다)개인은 이런 관찰 가능성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경험과 인식은 인터넷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유발한다. 일단 그런 효과를 ‘인터넷 매체의 가시성 효과’라 하자.

가시성 효과는 요컨대 자신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삼자적 관찰 경험과, 집합적 행동에 대한 관찰 경험, 그리고 이런 관찰이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지식이 결합해서 발생한다. 가시성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정적 가시성이 구현되는 인터넷 현실이 일종의 ‘자기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원래 타인의 행위에 대한 관찰 가능성은 ‘권력자’의 행위 역할에 속한다. 즉 관찰하는 시선은 권력을 함축하며, 관찰되는 자는 관찰하는 자의 시선에 의해 행동적으로 지배된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지위나 역할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 간섭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찰할 수 있다’는 시선의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한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관찰 가능성이 대인적 권력을 함축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관찰 가능성은 자체력과 통제력을 함축한다.

가시성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신의 공적인 모습과 행동에 대한 삼자적 관찰을 하는 경향이 강한 개인들을 자기관찰적(self-monitoring)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런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인상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대인적 의사소통에 대한 통제감이 높고, 타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관리에 능숙하다고 한다(Snyder, 1987). 이들은 또한 동료들과의 갈등을 잘 조정하며(Baron, 1989), 협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능숙하며(Jordan & Roloff, 1997), 더 능숙하게 대화를 유도하고 대화 패턴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Dabbs, Evans, Hopper & Purvis, 1980). 이런 자기관찰적 성격의 효과는 개인의 성격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의사소통 맥락의 효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의 모습과 행위에 대한 삼자적 관찰’이라는 조건이 확립되는 상황에서, 즉 인터넷의 매개된 상호가시성이 확립된 조건에서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인터넷 환경에서 가시성 효과가 형성되어 자기관찰 성향을 유발하는 방식과 같은 상황이나 맥락이 설정된다면, 그런 상황이나 맥락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의사소통 효능감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의 매개된 상호가시성은 ‘자기관찰적 조건(self-monitoring conditions)’을 조성하며, 이런 조건에서 상호작용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행동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대한 삼자적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 효능성의 강화를 경험한다.

나는 인터넷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의 의사소통 효능감 신장이 인터넷 매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가시성 효과’의 한 사례라고 본다. 그리고 이

렇게 ‘가시성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이 곧 개인의 공적 자아가 연결되는 과정, 즉 공중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본다. 인터넷 상호작용이 의사소통 효능감을 강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중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인터넷 매체 환경의 매개된 상호가시성으로 인해서, 정보원의 존재와 정보의 내용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유통되고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며, 덧붙여 이런 인식이 인터넷 참여자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인식이 동반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예컨대,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삼자적 관찰과 더불어 자신의 게시물이 유발하는 일련의 후속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타인의 반응을 검토하고, 후속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의사소통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다. 즉 개인은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조정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을 얻게 된다. 이는 ‘공적 사안에 대해 담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그런 참여를 통해 무엇인가 공적인 차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된다. 의사소통 효능감이 강화되는 것이다. 의사소통 효능감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정보 탐색 및 처리 효능감’, ‘정치 토론 효능감’, ‘공적 의견표명 효능감’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적 사안에 대한 인터넷 글쓰기 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 토론 효능감이 증가하며(김은미, 이준웅, 2006), 사회적 정체성이 노출되는 등의 인터넷 토론 조건에 참여해서 토론해도 또한 효능감이 증가한다고 한다(이준웅, 김은미, 2006). 이는 인터넷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혹은 댓글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다른 인터넷 이용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그런 관찰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터넷 상호작용 행위를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반응의 변화를 경험한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삼자적 관찰의 결과 ‘자신의 모습과 행위가 초래한 결과나 영향력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통제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매체의 과정적 가시성에 의한 자신의 행위와 타인의 반응에 대한 삼자적 모니터링에 의해 자신의 모습과 행위가 작용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토론하면 저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식의 인식이 강화되고, 그 결과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효능감이 신장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의사소통 효능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경험한 개인들이야말로 자신의 공적 자아의 발현과 타인에 대한 상호작용을 가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시민적 능력과 덕성의 강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인터넷 매체의 가시성 효과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기 관찰적 조건’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대한 관찰적 조건도 조성하며, 결정적으로 타인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런 관찰과 인식은 개인의 모습과 행동이 갖는 공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지적 효과를 강화한다.

의사소통 효능감 강화는 동기적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블로그 쓰기, 개인의 게시물 올리기, 댓글 쓰기 등과 같은 의견표명 행위는 물론,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찬성 및 반대의 투표를 하는 행위도 ‘가시성 효과’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동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개인의 의사소통 행위가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이 강화되면서, 공적 자아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결국 개인의 관심, 이익, 정체성의 표현이 타인의 그것과 충돌하고 조정되어 새로운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공적 의사소통 효능감의 신장을 경험한 개인들의 ‘공동관여의 감각’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공적 자아란 다름 아닌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 공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해 갈등의 조정을 고민하는 자아인데, 이는 자신의 공적인 모습이나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서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공중의 등장 또는 변화’에 대한 한 설명을 제공한다. 즉 인터넷 매체의 가시성이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는 공적 의사소통 효능감의 강화를 경험한 개인들의 공적 자아의 연결을 통한 공중의 형성이다.

4. 결론을 대신해서 : 담론공중의 의미

이 글에서 나는 공중의 등장을 공적 자아의 결합으로 이해하면, 공중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 주장을 전제 삼아서,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형성된 ‘매개된 상호가시성’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개인의 의사소통 효능감이 신장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공중이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공중의 형성’을 화두로 삼아 논지를 전개한 이유는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갖춘 공중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한국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인터넷 이용자의 행위가 능력 있고 덕성 있는 공중의 행위라고 보기에 무리라는 관찰을 검토해 보자.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자는 특정 사안에 대한 관심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하지만 또한 휘발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며, 과도하게 그 와중에 감정을 드러내거나 무례하게 굴며, 심지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과연 공중이라고 불러야 하나? 공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개인들의 공적 자아의 연결을 공중이라 한다면, 위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나?

나는 지난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인터넷 공간에서 읽기와 쓰기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효능감을 경험한 이른바 ‘비판적 담론 공중(critical discursive publics)’이 등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준웅, 2005). 이들은 주류 언론이 제시하는 공적 담론에 대해 ‘공정성 비판’을 제기하며,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견해들이나 그렇지 않은 견해들을 폭넓게 섭렵하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담론적 참여에 나선 사람들이다. 비판적 담론공중은 무엇보다도 우리 현실에 대한 지배적 해석을 제공하는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지식인 평자들의 해석적 권위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존재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주류 언론이나 지식인들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담론적 실천이 기본적으로 기존

의 지배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갖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실제 비판적 담론 공중 중에는 폭력적이며 무례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하는 자들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수는 아닌 것 같다. 그들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는 주류 언론의 기사나 논평, 주요 논객들의 블로그,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료 인터넷 이용자의 댓글을 읽는 사람들인데, 그들 대부분은 거의 쓰지 않고 단지 읽기만 하는 자들이다(이준웅, 김은미, 김현석, 2007). 일부만 적극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인터넷 의견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글쓰기에 따른 효과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타인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공중성과 관련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은미, 이준웅, 2006). 특히 토론규범 준수와 관용, 그리고 정치적 참여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인터넷 의사소통의 효과는 주로 읽기에서 발생한다. 즉 주목해야 할 자들은 ‘험한 말’이나 ‘막말’을 포함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과 더불어 주류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의 의견을 추구하는 읽는 자들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조회수, 검색수, 찬성수 등은 인터넷 글쓰기에 대한 반응이며 동시에 그것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된다. 즉 읽는 공중(reading publics)이 생산하는 읽는 행위에 대한 자료의 형성과 공개적 노출, 간헐적이지만 때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공적 사안에 대한 집합적 주목의 형성, 그리고 조회수나 검색수 등으로 드러나는 여론 지시력 등이 인터넷 이용의 사회적 효과와 관련해서 더욱 중요하다. 결국 담론공중이 때로 험한 말이나 막말을 한다는 사실이 문제라기보다는 인터넷 공론장이 그런 험한 말이나 막말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의견, 해석을 공유하고 수용하며,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인터넷 담론공중이 우리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그들의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 성급하게 평가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담론공중이 ‘시민성을 갖춘 공적 주체’로서 기능하는지 그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담론공중이 인터넷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민적 능력과 덕성을 신장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민주적 시민 참여를 위한 하나의 ‘시민성을 갖춘 공중’이 등장하는 현실적 조건을 찾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현석·이준웅(2007). 인터넷 정치 토론의 담론적 특성. 『한국언론학보』, 51권 4호, 356~385.
- 김은미·이준웅(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65~95.
- 김종길(2005). 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속의민주주의의 조건. 『한국사회학』, 39권 2호, 34~68.
- 윤영철(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총선 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109~150.
- 이준웅(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139~172.
- 이준웅(2005). 공론장 개념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 언론과 사회 분과. 경주.
- 이준웅(2007). 관계형 매체 이용의 증가와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 정운찬, 조홍식 (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이준웅·김은미(2006). 인터넷 정치 토론과 정치토론 효능감.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394~424.
- 이준웅·김은미·김현석(2007).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온라인 의견지도자의 속성.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358~384.
- 최영재(2008). 인터넷 공론장의 가능성과 속의 민주주의. 한국언론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 Barber, B. (1985).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ron, R. A. (1989).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conflict: Effects of the Type A behavior pattern and self-monitor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4, 281-296.
- Butsch, R. (2008). *The citizen audience: Crowd, publics and individuals*. London: Routledge.
- Dabbs, J. M., Evans, M. S., Hpper, C. H., & Purvis, J. A. (1980). Self monitoring in conversation: What do they moni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278-284.
- Dahl, R. (1991).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ahlgren, P. (1995).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Citizenship, democracy and the media*. London: Sage.
- Dahlgren, P., & Sparks, C. (1991).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Journalism*

- and the public sphere*. New York: Routledge.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
- Dewey, J. (1927/1954). *The public and its problems*. Chicago: Swallow Press.
- Ferree, M. M., Gamson, W. A., Gerhards, J., & Rucht, D. (2002). Four models of the public sphere in modern democracies. *Theory and Society*, 31(3), 289-324.
- Frazer, N. (1993).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IT Press.
- Habermas, J. (1962/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 Burger (T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Held, D. (1989).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hendahl, P. U. (1979). Critical theory, public sphere and culture: Juergen Habermas and his critics. *New German Critique*, 16, 89-118.
- Geuss, R. (2001). *Public goods, private good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rdan, J. M., & Roloff, M. E. (1997). Planning skills and negotiator goal accomplish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monitoring and plan generation, plan enactment, and plan consequences. *Communication Research*, 24, 31-63.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Free Press.
- Lippmann, W. (1925). *The phantom 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
- McAfee, N. (2004). Public knowledge.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0(2), 139-157.
- Nathans, B. (1990). Habermas's "public sphere" in the era of the French Revolut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16, 620-644.
- Ober, J. (2008). *Democracy and knowledge: Innovation and learning in classical Athe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ters, J. D. (1993). Distrust of representation: Habermas on the public sphere. *Media, Culture, and Society*, 15(4), 541-572.
- Shah, D. V., McLeod, D. M., Friedland, L., & Nelson, M. R. (2007). Introduction: The politics of consumption/The consumption of politic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1 (pp.6-16). LA: Sage.

- Schudson, M. (1998).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civic life*. New York: Martin Kessler Books.
- Schudson, M. (1992). Was there ever a public sphere? If so, when? Reflection on the American case.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pp.143-161.
- Schudson, M. (2007). Citizens, consumers and the good socie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11. LA: Sage.
- Sennett, R. (1978).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Vintage.
- Snyder, M. (1987). *Public appearances private realities: The psychology of self-monitoring*. New York: WH Freeman and Co.
- Speier, H. (1950). Historical development of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0, 376-388.
- Tarde, G. (1898/1969). Opinion and conversation. In T. N. Clark (Ed.), *Gabriel Tarde: On communication and social influence* (pp.297-31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mpson, J. B. (1995). *The media and modernity: A social theory of the med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Young, I. M.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Beyond deliberative democracy. In S. Benhabib (Ed.),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aret, D. (1992). Religion, science, and printing in the public spheres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pp.212-235.

최초 투고일	2009. 1. 8
1차 수정일	2009. 7. 8
2차 수정일	2009. 8. 19
게재 확정일	2009. 8. 20

Abstract

Mediated Intervisibility of the Internet Public Sphere and the Emergence of Discursive Publics

June Woong Rh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in which the rise of the Internet media for public discussion creates social conditions under which Internet readers and writers make themselves 'discursive publics' who facilitate new forms of public engagement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plain that a public is constructed around issues and events and that there are other collective subjects such as nations and right-bearing citizens overlapping with publics, I introduce the notion of 'public as an association of public selves.' Critically appropriating the notion of the transformation of visibility developed by Thompson(1995), I suggest that the Internet as a media environment produces yet another turn of the transformation of visibility by which interconnectedness, documentability, and traceability of online actions creates a new visibility condition. Reading and writing under the 'mediated intervisibility' condition of Internet public spheres could make readers and writers associated with one another. Mediated intervisibility means a condition under which one's own presence and visibility as well as others' are recognized and utilized in subsequent interactions. I argue that discursive interactions among readers and writers under this condition should be sufficient for them to make a public.

Key Words : making publics, Internet public sphere, visibility, communication efficacy